세종정책총서 2020-1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 아베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창수 지음



세종연구소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 아베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창수

現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겸 수석연구위원.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분과위원회 위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현대일본학회 회장, 2011년 8월~2012년 3월까지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SAIS, Johns Hopikns University에서 Visiting Scholar,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세종연구소 부소장,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세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1994년 동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발표논문 및 기고문으로는 "민주당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도서출판 오름, 2014); "日韓未来ビジョンの構築を,"『外交』Vol.18 (時事通信社, 2013); "韓国における日本研究: 多様化と専門家のジレンマ," 立命館大学国際地域研究所紀要,『立命館国際地域研究』第36号 (2012) 외 다수.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 아베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2020년 11월 09일 발행

지 음 | 진 창 수
발행인 | 백 학 순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전화 | (031) 750-7615
팩스 | (031) 754-0100
홈페이지 | www.sejong.org
등 록 | 2001년 1월 19일 제1-26호
ISBN | 978-89-7429-565-3

※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2020-1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 아베정권과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 창 수 지음

세종연구소

서 문

한국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아베 총리의 우파적 주장과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2019년 아베 총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 국민들은 'NO 아베'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사실 아베 총리는 우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일본 정계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베 총리 이후 한국에서는 '실용주의자 스가 총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스가 총리도 아베 시대의 주장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으며, 일본의 비판적인 대한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서 우파적 이념을 중시했던 아베 총리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일본 사회의 변화에 한국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동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아베 총리의 우파적 이념성향과 우파 시민단체와의 연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베 총리의 우파적 정책은 우파 시민단체의 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을 통해 지금까지 일본정치에서 터부시되었던 역사인식의 문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그리고 헌법 개정까지 주장하면서 우파의 아젠더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베의 장기집권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우파 시민단체들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결국 아베 총리의 대한 강경정책은 아베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우파 시민단체들의 집요한 반한 운동, 그리고 비판적인 일본 여론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 동안 일본 사회를 우경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베가 주장하는 우파적 정책이 지속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아베 총리만큼 우파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는 정치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우파 시민단체와 일본 정치권이 결합하여 보수 우경화의 정책을 추진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베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던 헌법개정 문제는 이제 그 동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한 아베가 가지고 있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에 비판적인 국제환경이 존재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베시대 만큼 우파적 정책이 일본 정치권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우파 시민단체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파 시민단체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일본회의를 보더라도 구성원이 고령화하고 폐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일본 사회에서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는 우파 시민운동도 점차 정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점에서 일본은 보수 우경화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일본의 상황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일본의 보수 우경화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한일관계 개선에 등불을 밝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한신대학의 하종문 교수와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교정을 해준 연구기획본부 이재화씨, 일본연구센터 신나연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진 창 수

차 례

서문

1. 문제제기 ····· 9

1) 필요성 ····· 9
2) 연구방법 및 구성 ····· 10

2. 아베 정권과 일본의 보수 우경화 ····· 13

1)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 ····· 13
2) 아베 수상의 일본 정치사적 의미 ····· 16

3. 아베 보수이념의 근원 ····· 21

1) 자학자관의 극복 ····· 21
2) 반 좌파, 반 리버럴 ····· 24
3) 복고주의적 내셔널리즘: 야스쿠니 참배는 국가관의 근본 ····· 26
4) 미일안보 강조 ····· 29

4. 아베 정권과 시민사회의 연계 ····· 34

1) 일본회의 ····· 35
2) 역사교과서 문제 ····· 47
3)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 ····· 55
4) 일본 우익단체의 실체와 미래 ····· 64

5. 결론: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 72

1) 일본 우경화의 특징과 한계 ····· 72
2) 한일갈등의 관리시스템 필요 ····· 75

참고문헌 ····· 77

별 첨 ····· 87

1. 일본회의와 우경화 관련 연표 ····· 89
2.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대회 식순 및 결의문 ····· 96

1. 문제제기

1) 필요성

본 연구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베(安倍) 총리의 이념적 성향과 함께 일본정계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정계의 총체적 보수화는 일시적이고 국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사회 전반에 국민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사회의 보수화는 정계와 시민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정당 간 역학의 변화에 명확히 드러나면서 사회당, 공산당과 같은 혁신정당이 몰락한 반면, 유신회와 같은 우파 정당이 등장하였고 공명당 같은 중도 정당도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 내 역학구도를 보더라도 고치카이(宏池會)와 같은 비둘기파의 세력이 약화된 반면, 전후세대 정치가 중에 우파경향의 정치가들이 약진하고 있다. 이제는 아베총리를 상징으로 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자민당의 주류로 정착함으로써 자민당 내 리버럴 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계에서 '주장하는 외교'를 외치는 전후세대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이 반성하던 대외 태도는 사라지고, 보수우경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양국에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외교 당국의 현안 장악력과 한일관계의 관리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은 기존의 자학사관을 반대하는 역사 수정주의 주장이 강하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했던 과거 일본 총리와는 다르면서 오히려 '역사 수정주의'를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베의 '주장하는 외교'

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가져오고 동북아 국가들과는 과거사 논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우경화 흐름은 정치권과 우파 시민단체와의 강한 결합속에서 정착되었다고 설명할 것이다. 특히 아베정권 시대에서는 우파 시민단체와의 강력한 유대속에서 우경화의 흐름은 급격히 강화되었다. 아베총리는 지금까지 터부시되었던 역사인식문제, 안보 법제, 헌법개정문제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일본 사회와 정치권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 따라서 우경화의 진전도 일본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우파 운동의 총결합체인 일본회의가 점차 폐쇄적이고 고령화됨에 따라 우경화 흐름의 동력은 한계에 달한 측면도 있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정치 엘리트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오피니언 리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보수정치가와 보수우익 시민단체와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보수우경화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아베총리의 정국 운영과 이념 분석, 아베정권과 시민단체의 연계 구조 파악, 일본 우경화의 향후 전망 등의 세 영역 및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아베 총리의 보수적 인식과 주장이 시민사회에 어떻게 전달되고 확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정치와 시민단체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력 정치가 및 관료와의 면담을 통해 우경화의 의도와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수 우경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계 엘리트, 시민사회 대표, 오피니언 리더들의 면접조사가 불가피해서 올 1월 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역사교과서 문제, 영토 갈등, 야스쿠니 참배와 '납치'문제 등은 물론, 개헌과 같은 우경화의 실질적인 추진력은 보수 정치권과 보수적인 시민사회 단체, 나아가 보수 언론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위에서 발현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와 같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시민 단체를 추적하여, 국제적인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정치권과 관련 단체, 매스컴을 아우르는 연계 사례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화와 우경화를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보수화는 전후 일본의 근간이 되었던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수화로 규정하였다. 우경화는 전전 제국주의를 미화하거나 회귀하려는 현상으로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수화와 우경화의 연구는 일면적인 분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아베 총리의 이념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우익단체들의 성향을 분석해 왔다[1]. 주로 이념분석에 치우쳐 왜 아베

[1] 권혁태. "특별기획: 일본 '우경화'의 재해석/ 교과서 문제를 통해 본 일본사회의 내면 읽기", 『역사비평』, pp. 16~33, (역사비평사, 2001). 김수종. "일본의 보수 우익화를 경계하면서", 『인물과 사상』, pp.204~210, (인물과 사상사, 2002).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 사회』, 제99호, pp. 36~62, (비판사회학회, 2013). 김태기. "일본회의의 성장과 종교단체의 역할: 세이쵸노이에(生長の家)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4, pp. 263~311, (한일관계사학회, 2016). 문은석.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 –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50, pp. 85~10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석주희. "일본 우익에 대한 소고 – 아베내각과 일본회의", 『내일을 여는 역사』, 76호, pp. 20~33,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9). 이경주. "특별기획: 일본 '우경화'의 재해석/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 『역사비평』, pp. 34~54, (역사비평사, 2001). 이기진. "초점: 야스쿠니와 일본 언론, 그리고 우경화: 사이좋게 보폭 맞춰 우향 우하는 일본 언론과 야스쿠니 이데올로기", 『민족 21』, pp. 128~137, (민족21, 2007). 이신철.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일역사논쟁 –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pp. 222~25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조경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국가주의·백래시의 연동: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pp. 98~119, (새얼문화재단, 2019). 키노시타 치가야·김상운. "아베 정권에서 일본은 우익화 했는가?: 정치의 수축과 일본 사회의 향배",『실천문학』, pp. 34~48, (실천문학사, 2014). 타와라 요시후미. "[說材] 역사를 改作하는 우파세력의 최근동향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5권, pp.

정권이 지속되고 아베의 대한 강경발언이 지지를 받는 정치적인 배경의 설명에는 미약한 점이 있다.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 내부의 역학에 따라 변화하는 일본 정치권의 주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영구의 한계점을 전부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아베 정권과 우파 시민단체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들의 연계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장은 우리 대외정책에서 일본이 제약 요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전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42~16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18: 최근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에 대한 우리의 외교안보적 대응방향』, pp. 1~1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홍성후.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pp. 45~64, (한국동북아학회, 2014).

2. 아베 정권과 일본의 보수 우경화

1)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는 일본 정치권의 세력관계 추이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2] 일본 정계의 보수화는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가 투영된 결과로 보아야 하며, 향후에도 일본 정계에서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주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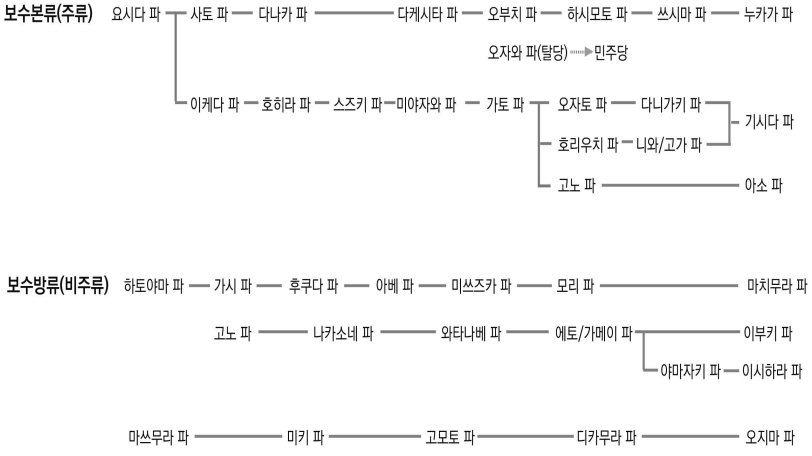
첫째, 일본 자민당 내 역학관계에서 우파적 이념성향인 매파 세력의 확장이 두드러진다. 오부치(小渕) 내각 이후, 모리(森) 내각이 등장하면서 자민당 내 '매파'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구 후쿠다파 계열의 영향력이 커져서 2000년 이후 민주당 정부의 3년을 제외하면, 약 15년을 자민당 내의 매파 파벌이 정권을 담당해 오고 있다. 전술한대로 모리(森), 고이즈미(小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베 총리는 일본 자민당내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이들은 매파 파벌인 세이와카이(清和会) 출신들이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소(麻生) 총리의 경우도 이념적으로는 매파 의원으로 간주된다).

---

[2] 박철희. 2014.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호. 1955년에 요시다(吉田)파와 反요시다파가 합당하여 만들어진 자민당의 파벌구도를 보면 상이한 이념성향의 계파가 존재했다. 하나는 시장중시의 경제운영, 평화헌법 유지, 중국대륙과의 협조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고치카이(宏池会)로 불리는 리버럴 세력(비둘기파)으로 이케다(池田), 오히라(大平), 스즈키(鈴木), 미야자와(宮澤) 등의 총리를 배출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개입형의 경제운영, 헌법개정, 반공아시아국가와의 협조를 중시한 우파 세력(매파)으로서 기시(岸), 후쿠다 다케오(福田 赳夫) 총리가 나온 세이와카이(清和会)와 나카소네파(中曽根派) 등이 이에 속했다.

특히 2012년 아베 내각의 재등장은 자민당 내의 파벌구도에서 보수 우파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자민당을 파괴하겠다”는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이후 2012년 민주당 정부 때까지 자민당 파벌정치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제2차 아베 정권이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이어가면서 자민당 파벌정치는 다시 부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벌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많은 신진 의원들도 보수적인 이념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자민당의 우편향적 보수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주요 파벌 개요]



둘째, 정당 간의 역학 관계에서도 보수화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이른바 ‘55년 체제’하에서는 일본은 유럽과 달리 우익정당은 없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우익정당이 생겨났으며, 혁신 정당이 고립되면서 보수이념 성향의 정당들이 총체적으로 강화되는 정계 재편이 일어났다.[3)]

3) 박철희. 2014.

제2차 아베내각을 탄생시킨 2012년 말의 중의원 선거와 2013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 모두의당(みんなの党) 등 신생 정당이 크게 약진하였다. 일본유신회에는 우익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우익적 현상은 있었지만, 제도권의 일부로 진출한 것은 전후 처음이다. 반면, 중도보수의 민주당과 생활의당(生活の党), 진보계열의 사민당(社会民主党)과 녹색바람의당 등은 참패하였다. 그 후 중도보수의 민주당, 민진당, 생활의당과 진보·혁신 계열의 사회당(사민당), 공산당, 녹색바람의당(みどりの風党) 등은 세력이 위축되거나 몰락한 반면, 보수·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 모두의당, 희망의 당(希望の党)과 같은 신생 정당이 출현하여 약진하였다. 진보와 리버럴은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일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권이 점차 이념적으로 우편향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 정계의 보수화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우익화 현상도 두드러진다. 탈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노선과 관련하여 평화국가의 논리를 수용하는 세력은 소수로 전락했다. 대신 주류로 등장한 것은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세력이나, 일본을 자주국가로 만들자는 정치가들이다.[4] 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당'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초당적인 우파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결성된 '모두가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화', 2004년에 결성된 '일본 영토를 지키는 의원 연맹',

4) 일본 미야자와 정권은 1993년 8월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하였다. 또 호소카와(細川) 수상은 '침략전쟁'이라고 발언하였고, 무라야마(村山) 총리는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보수세력에 '새로운 역사교과서' 추진 운동을 개시했다. 1998년에 한일 간에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지만, 다음해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역사만들기 모임'의 역사왜곡,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동경도지사 당선,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 보수우경화 움직임이 선명해지는 시기였다.

2007년에 결성된 '위안부 문제와 난징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모임' 등이다. 이들은 일본 정계의 불안정성과 유동성과 함께 기존 정당의 틀을 넘어 다양한 정치세력과 이합집산하는 현상을 가졌다. 더구나 이들은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5] 1990년대 들어 국내외적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 사회에서 우익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자민당 보수의원들은 역사관련 다수의 보수모임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하고,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의 철회를 요구했다. 2000년대에는 많은 민간의 보수 단체들의 활동과 자민당과의 연계는 강화되었다. 2002년에 '네트 우익(ネット右翼)'의 활동이 가시화되었고, 2007년에는 오프라인에서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이른바 '재특회(在特会)'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되었다. '행동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재특회는 "조선학교 무상화 반대, 외국인 참정권 반대, 외국적 주민에게 생활보호 지급 반대, 영토 탈환"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재일한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혐한론'을 주도해 왔다.[6]

2) 아베 수상의 일본 정치사적 의미

아베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흐름을 이끄는 파벌의 세이와이카이(清和会)에 소속한 3세 의원이다. 첫 당선은 1993년이며 이 총선거에서 비(非)자민연립정권이 성립되어 자민당은 결당 이래 처음으로 정권을 잃었다. 야당의원으로서 정치가 인생을 스타트한 아베는 자민당

[5]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전후 냉전기를 통해 반전평화운동, 인권운동, 호헌운동 등 일본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리버럴한 시민세력은 해체, 분열의 길로 들어선 반면, 역사교과서, 영토 문제 같은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운동은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6] 한상일. 1999.8.23. "시론 일본 우경화 바로알자", 『조선일보』.

이 정권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개혁해 가는 것을 스스로 정치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아베의 주요 적은 민주당·민진당이었다. 따라서 고이즈미처럼 당내에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내 결속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였다. 인사에서 보면, 파벌 영수 클래스의 상당수를 각료로 기용하였다. 그것은 고이즈미 정권이후 총리·총재의 인사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수상의 자리에 복귀한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금융완화, 적극 재정, 규제완화(성장전략)를 '세 개의 화살'로 자리매김하였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자민당의 전통적인 이익유도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양립시킨 것이다.[7]

아베 정권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첫째 자민당의 집표세력인 이익집단들은 그대로 온존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자민당의 우호단체인 전국우편국장회(전특/全特: 젠토쿠)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농협개혁은 JA전중의 동의하에 법인화에 그쳤다. 둘째 톱다운 정책 결정을 이용하여 업계 단체등과의 관계를 긴밀화시켰다. 관저 주도의 정책을 결정한 점에서는 이전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정민영화를 주장했던 고이즈미 수상은 전국우편국장회(전특/全特: 젠토쿠)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정족 등의 저항의 반대를 돌파하려고 한데 비해 아베 총리는 약화된 농림족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농협개혁을 추진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따라서 고이즈미 내각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전국우편국장회(전특/全特: 젠토쿠)를 비롯한 우호 단체의 약체화를 가져오면서 자민당에 대한 반대가 강화되는 데 비해 아베 정권하에서의 자민당은 업계 단체 등과의 관계가 긴밀화되는 정반대현상이 나타났다.[8]

---

[7] 아베는 직접 '세계에서 가장 기업이 활약하기 쉬운 나라를 목표로 하자', '규제를 깨자'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자민당이 이익집단들은 온존시켰다.

[8] 2013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우편국장회(전특/全特: 젠토쿠)가 오래간만에 자민

아베 자민당은 '자주 헌법 제정'의 당의 기본방침을 비롯해 우파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민주당·민진당에 대항하는 한편, 자민당의 우호단체들을 포섭함으로써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자민당내의 인식은 2009년 정권으로 탈락하게 된 것은 자민당의 우호세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베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권운영을 하고 있다. 즉, '안쪽 결속'과 '밖으로의 대항'이라는 점이 야말로 아베 자민당의 특징이 존재한다.

무당파층을 잡으려던 고이즈미 수상과는 달리 고정표를 중시하는 아베 정권은 안정적으로 국정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하였다. 야당으로서 임한 2012년 총선에서 480석 중 294석으로 승리하고 2년 후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 121 의석 중 65석, 14년 총선에서 475석 중 291, 16년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 121 의석 중 56석으로 국정 선거에서 이례적인 4연승을 달리고 있다. 안정적인 지지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베 자민당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특징으로는 '관저 주도' 와 '아베 1강'을 들 수 있다. '관저 주도'는 총리 관저에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자민당 정권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 조직과 자민당의 족의원(이권에 관여하는 정책통)들이 조정하는 '보텀업(bottom up)'의 권력 분산형이었다. 즉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관료기구나 자민당 내 '정무조사회'를 통해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성(省)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자민당 족의원과 이익단체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기존의 정책결정과는 달랐다. 아베 총리의 관저 측근 그룹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관계 성(省)에 지시하는 '톱다운((top

당으로부터 조직 내 후보를 옹립한 것 외에 민주당 정권 때에 거리를 둔 니치이(日医: 일의), 니시(日歯: 일치), JA그룹 등도 자민당의 공천후보 지원에 나섰다. 기업. 단체헌금도 증가한 것이다. 아베 시대에 다시 자민당의 우호 단체는 되살아난 것이다.

down)' 정책결정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는 여당인 자민당조차 정책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관저 주도의 정책결정시스템은 아베노믹스에서 시작되어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 북방 영토 해결을 추진하려는 일·러 교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등 외교안보정책 전반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도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관저 주도'로 정국을 이끌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는 아베 총리와 달리 정부 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은 확보되었다. 이에 반해 아베 총리는 측근인 몇몇 '관저의 비서'가 중심이 돼 정책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은 불투명하고 밀실 결정이 많았다.

'아베 1강'이라는 개념은 아베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베 총리는 무당파층을 잡으려던 기존의 수상과는 달리 자민당의 고정표를 다지면서 국정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함으로써 자민당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다. 2012년 중의원 총선에서부터 시작하여 4번의 국정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하였다. 그로 인해 아베의 자민당 장악력은 강화되어 2015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투표 없이 재선되었다. 이로써 '아베 1강'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 1강' 확립에는 자민당 내 파벌의 약화도 한몫을 하였다. 과거 자민당 파벌의 영수는 당내 유력 정치인으로 총리 후보였다. 파벌의 영수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을 하면서 종종 총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시기에는 아베 총리가 정부와 당내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파벌의 힘이 약화되어 아베 총리에 도전하기가 힘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아베는 자민당 내 주요 경쟁 인사를 포섭함으로써 아베의 정국 장악력은 더욱더 확고해졌다. 아베의 포섭적 인사로 가장 명료하게 보이는 것이 간사장 포스트였다. 지방조직에 인기가 있어 아베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리버럴 색이 강해 이념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노련한 파벌 정치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등 아베는 잠재적 경쟁자를 간사장으로 기용하여 '아베 1강' 체제를 굳혔다.

아베 총리는 '관저주도'와 '아베 1강' 체제를 완성하였지만, 자신의 신념인 우파 정책을 마음대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아베 정권 초기(2012년 12월)에는 아베 총리는 우파적 신념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매달리면서 헌법개정의 추진은 약화되는 모습조차 보였다. 2013년 12월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지만 그 이후 미국의 반대와 국내적 반발로 인해 야스쿠니 참배는 하지 못했다. 또한 2015년 8월 종전 70년 내각총리담화(이른바 아베 담화)는 일본의 우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정도였다. 아베 총리는 정권 초기에는 우파적 정책 색깔을 감추면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우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시기는 2015년 '아베 1강' 체제가 완성된 이후부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이나 안보법제의 강행 채택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당이 개헌 추진 의석인 중참의원 2/3를 차지했음에도 헌법개정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베의 장기 집권하에서는 '아베노믹스에서 얻은 정치적 지지를 안보정책과 헌법개정에서 소진'하는 상황이 반복하여 일어났다. 리얼리스트(realist) 아베와 이데올로그(idealogue) 아베의 적절한 타이밍의 조절이 아베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3. 아베 보수이념의 근원

1) 자학자관의 극복

아베가 처음 당선된 것은 1993년 중의원 선거이며, 이때 자민당은 대전환기를 맞은 시기이다.[9] 야당 정치가로서 아베는 '보수 정당으로서 자민당의 재생'이라는 테마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라는 정치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베는 이 당시부터 자민당의 존재 방식에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정말로 자민당은 보수정당인가. 보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원래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 당시 비(非)자민정권으로 발족한 호소카와(細川)수상은 내각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기자 회견에서 '대동아 전쟁'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 전쟁이라고 보면서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자민당 일부는 반발합니다. 8월 23일에 당내에 '역사·검토 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음의 '취지'를 내걸었다.

> 호소카와(細川)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이나 연립정권의 '전쟁책임 사과표명' 의도 등에서 보듯 전쟁에 대한 반성의 명분으로, 일방적 자학적 사관의 횡행은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사실(史実)에 입각한 일

[9] 전후 최대의 뇌물수수 사건인 리크루트 사건 등이 있어, 미야자와 키이치(宮澤喜一) 내각은 정치 개혁의 격류에 삼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야자와 총리는 소선거구 도입 등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고 이것에 동조한 것이 다케시타파(竹下派)로부터 분열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씨나 하타 쓰토무(羽田孜)씨 등의 그룹(개혁포럼 21)이었다. 6월 18일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총선 결과 8월 9일에 야당 세력이 결집하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이 성립하게 된다. 그 5일 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말한 '고노 담화'가 나왔다.

본인 자신의 역사관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확신한다.(역사. 검토위원 회편『대동아전쟁』총괄. 1995년 (앞에서 서술한 서적))

그들은 일본의 역사인식을 '점령정책과 좌편향 역사교육'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래서야 아이들이 자기네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전후 교육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일본을 단죄하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데는 범죄적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아베는 총리가 되기 전에는 우파적 신념이 강해 좌파의 '자학사관'에 적극적인 반대를 주장하였다.[10] 그의 인식은 '자학사관'으로 인해 일본인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는 "종군 위안부의 기술도 큰 문제점이 있으며… 그 강제성을 증명하는 문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고노 담화를 비판했다. 자민당 간사장대리 시절에는 "종군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언하였다(2005.3.27 강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아베 총리의 보수적인 역사인식은 한층 선명해졌다. 2013년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157명의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했고, 12월에는 아베 총리 본인이 참배를 강행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자제되었던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4년에 제2차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에 대한 검정을 실행하였다.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내용은 위안부의 역사적 경위와 일본의 문제점 등의 사실을 살펴보기보다는 고노담화가 만들어지게 된 경과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고노담화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의한 반성의 결과라기보다는 한일의 타협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이후에도 아베

10) 安倍晋三・岡崎久彦. 2004.『この国を守る決意』, 扶桑社, ch.4.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은 일본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고노담화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의 내용은 아베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 잘 나타난 것은 2015년 8월 종전 70년 내각총리담화(이른바 아베 담화)이다.[11] 1995년 전후 50주년을 계기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한국에서는 비판도 많았지만, 일본정부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죄한 담화였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각국,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 이에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겠습니다"에 담긴 내용은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기준점이 되었다. 그 후 2005년 종전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표현은 이어졌다.

그러나 종전 70주년 아베담화는 아베총리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담화였다. 아베 담화는 고노 담화,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직접적 사죄를 애매하게 피해 간 것이다. 즉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으로, 현실과도 타협해 비판을 피해 가려 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차세대는 '더 이상 사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의 주장을 선명하게 나타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아베 담화에 한국이나 한반도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의 희소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담

11) 1990년대 들어 전후 일본 정치를 지배해왔던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인 이른바 '55년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이후의 내각들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일본이 20세기 전반에 벌인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내각의 인식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일을 전후하여 정부 담화, 총리의 발언 혹은 공동성명 등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종전 50주년과 60주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이다. 조양현. 2015. "아베(安倍) 담화 이후의 한일관계,", 『한일협력』, 가을호.

화는 연합국과 중국, 동남아의 피침략 국가들에 대해 사죄를 언급한 반면,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는 없다. 중국이 입은 피해와 중국이 일본에 베푼 관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기존 역대 내각이 한반도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역사인식을 발전시켜 온 것에 비추어 아베 담화는 퇴행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아베 담화가 한국을 '패싱'하고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조선에 대한 강제병합과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최대의 외교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아베의 인식을 담고 있다.

2) 반 좌파, 반 리버럴

아베의 가장 큰 특징은 '좌파', '리버럴'에 대한 비판의식을 명확히 나타낸 점이다. 최초의 저작인 '"보수혁명"선언'에서는, 일본의 '리버럴'은 유럽형이 아닌, 미국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의 리버럴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분배주의'이라고 주장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의 '인간친화적 정치'는 이 '리버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보수'는 애매한 "리버럴적 인식에, 명확히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 가는 입장"이라고 규정한다. (『 '보수혁명' 선언』).

『 '보수혁명' 선언』의 부제는 '안티 리버럴의 선택'이다. 아베는 정치가가 된 당시 보수의 사상적 관심보다도, 안티 좌익이라는 생각이 앞섰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 내가 보수주의로 기울어갔다는 것은, 스타트는 "보수주의"자체에 매료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진보파', '혁신'이라고 불린 사람들의 이상함에

반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베의 좌익 비판은 가속화되었다. 수상 취임을 2년 앞둔 2004년의 대담본『이 나라를 지키는 결의』에서는 노골적인 좌익 비판이 반복된다.

아베에 따르면, 좌파 사람들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는 세력'이며 '전후 분위기'에 있을 따름이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

> 그러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국의 일이면서, 일본이 안전 보장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면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거나, 또 일본의 역사관을 깎아내리거나 자부심을 갖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한다. 한편, 일본과 적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강한 sympathy를 보내거나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일본 정부에 소송을 걸도록 부추기거나 여러 곳에서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앞에서 서술한 서적)

아베는 자민당 의원 일부도 '전후 분위기'에 감염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조함을 드러낸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정(情)'보다 핵문제에 대처하는 '지(知)'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당내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모든 TV와 강연을 통해서, 또 국회답변 등을 통해 철저하게 논파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베 신조라는 정치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상대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중하게 합의 형성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올바름에 근거하여 '논파'하는 것에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베가 반좌파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사히신문과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이다. 그는 초선 때부터 아사히 신문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보수혁명' 선언』)

그럼 1993년 선거에서 '일본신당(日本新党)이나 당시의 신생당에 언론은 분명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언론이 '자민당은 쓰러뜨려야 할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보수혁명' 선언』)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서는 50%의 득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언론의 권력이라는 것은 점점 커져간다'고 경계하고 있다.

아베는 반복해서 아사히신문을 눈엣가시로 삼아 강한 말로 공격한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대미 인식에 대하여, '국민을 오해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사히신문을 지적한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

또, 일본인의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일교조(日教組)의 책임이 크다고 하여, 경계심을 환기한다. 무라야마 내각 이후 자민당 안에도 일교조(日教組)와 교류하는 의원이 나왔지만, 화합 무드는 금물로 "일교조(日教組)에 대한 안이한 견해를 배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 일교조(日教組)는 문부성과도 접근하는 것으로 '숨겨진 방책'을 손에 넣어, '지방에서는 과격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3) 복고주의적 내셔널리즘: 야스쿠니참배는 국가관의 근본

일본에서 '우익'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는 일본 고유의 역사에 태생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좌익'이 메이지(明治) 말기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마르크스주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12] 우익이 추구하는 부국강병이라는 국

[12] 전전(戰前)의 우익운동사는 크게 네 개의 흐름이 있지만, 이 중에서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익 세력은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와 군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들의

가적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지 일본은 국권의 확장을 추구하였다. 막부 말기(幕府末期)의 '존왕양이(尊王攘夷)' 혹은 '존왕도막' 운동에 뿌리를 두는 근대 일본 우익운동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 이후 국권 확장의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천황 중심의 근대 일본 및 일본 제국주의의 건설에 사상적 근거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의 보수우익적인 사상적 DNA는 막부 말기의 존왕양이론의 대표 주자이고 근대 일본의 우익 사상 주창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야마구치 현(山口県)에는 쇼인이 배우고 가르친 쇼카 손주쿠(松下村塾)가 있다. 쇼카 손주쿠는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유신을 이끌어낸 제자들을 육성한 곳이다. 야마구치 현을 본적지로 하는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요시다 쇼인이고, 애독서는 후루카와 카오루(古川薫)의『유혼록의 세계 (留魂録の世界)』(유혼록은 요시다 쇼인의 저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시다 쇼인은 죠슈번(長州藩)을 중심으로 막부를 타도하고, 명치유신을 이룬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晉作), 이노우에 분타(井上聞多),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명치유신의 지도자들을 육성한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는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의 문하생으로, 죠슈번(長州藩)을 막부타도(倒幕)로 유도한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의 이름을 따서 「晋三」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요시다 쇼인의 대외사상의 일부인 정한론은 명치 정부 인사들에게 조선침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쇼인은 '일군만민론(一君萬民論)'을 주장하여 천황제를 옹호하였다. 그는 유작인 옥중 유작『유수록

이념 및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다. 막말의 '존왕양이'/ '존왕도막'에 참여했던 우익 세력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국가 노선을 두고 분열되었는데, 그 핵심 의제가 이른바 '정한론'이었다. 1873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을 정벌하고 여세를 몰아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일본의 실력을 쌓아 대륙으로 진출한 것인가를 두고 권력 투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후자 즉, 국내 체제 정비 후에 대륙 진출이라는 국가 노선이 결정되었고,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했다. 한상일. 2014.「일본의 우익사상과 아시아주의」,『일본비평』, 10호.

(幽囚録)』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류큐(琉球)(현재의 오키나와)의 일본 령화, 조선의 일본의 속국화, 만주·대만·필리핀의 영유를 주장하였다. 아시아를 연대(아시아 주의)가 아닌, 침략의 대상으로 간주한 쇼인의 사상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탈아입구론, 해양국가론, 전후의 중국견제론에 영향을 주었고, 아베의 대외사상과 일맥상통한다.[13]

아베의 복고주의적 내셔널리즘은 우선, 야스쿠니신사의 수상참배 정당성에서 나타난다.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이미 나카소네(中曽根) 내각 때에 결착이 끝났고, 공식참배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합헌이라는 견해를 강조한다.

>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직접 군국주의와 결합시키는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참배를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조용하게 국민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아베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고집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관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목숨을 내던지고라도 지키려는 국민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의 공적 등을 알리려는 표창이 없다면, 국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

13)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다.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정한론자(征韓論者)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는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인 '주권선(主権線)'의 방위에 사활적인 전략적 요충지, 즉, '이익선(利益線)'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한반도가 일본이 아닌 제3의 세력의 영향권 하에 들어갈 경우, 일본 열도에 대해 "머리 위의 칼(頭上の刃)"로 작용한다는 논리로 한반도와 대륙침략의 길을 열었다. 한반도가 대륙세력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거나 일본과 우호적인 세력이 한반도에 안정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처럼 일본의 안전에 있어 한반도는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졌고, 일본의 보수세력은 한반도의 식민지화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야스쿠니신사의 문제는 항상 국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자유 등 여러 가지 권리를 담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신변의 위험을 무릅써도,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한, 국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을 표창(顕彰)하는 것을 국가가 포기하면, 누군가 국가를 위해서 땀이나 피를 흘리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4) 미일안보 강조

아베는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를 스스로의 정치적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4] 반공주의자, 개헌론자, 친대만파, 친한파였던 기시 총리는 역대 총리들과 다르게 외교에 큰 관심을 갖고, 미일관계,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군사적 의미의 보통국가화 작업(집단자위권 행사 통한 대등한 미일동맹화, 자위대의 군대화, 헌법개정 등)에 영향을 주었다. 기시 총리는 임기 중에 미·일관계 및 독자적인 외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헌법의 재검토 및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였다.

아베도 외교·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미일기축'을 강조하고, 미일안보의 강화를 설명하고 있다. (『'보수혁명' 선언』) 아베는 아시아주의에의 경계(警戒)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있다는 지나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정책

14) '쇼와의 요괴(昭和の妖怪)'로 불린 기시는 전전의 엘리트 관료로 만주국 산업부 차관과 1941년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냈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미군정에 의해 석방되어 정계 복귀한 후, 1955년 자민당 결성에 참여하고 1957년에 총리 취임하였다.

적으로는 치명적인 다름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불씨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일본은 '미국, 유럽이 관습적으로는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찍이 오카구라덴신(岡倉天心)이 『동양의 이상』에서 말한 '아시아는 하나' 라는 관념은 배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아베가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와의 가치관의 차이를 강조한다.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국가체제가 너무 다르다. 가치의 체계도 너무 다르다. 그러한 나라와는 역시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 주장의 중심이다.

이 관점으로부터 아시아에 '멀티 대화기구' 혹은 '집단안보기구'를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단언하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15]

결국 기시가 못다 이룬 보수 이념과 정책은 아베에 의해 계승되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화 작업(집단자위권 행사 통한 대등한 미일동맹화, 자위대의 군대화, 헌법개정 등)과 맥을 같이 한다.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보수계 언론과 안보

15)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이 추구해야 할 국가노선으로 다양한 국가상을 제시하였고, 당시 주요 정치 쟁점이었던 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 및 재군비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다. 공산당과 사회당 계열의 좌파 정치가들은 '평화주의'와 '비무장 중립'의 입장에서 미일안보협력과 재무장에 반대하였다(이른바 사회민주주의 노선).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같은 보수 정치가들은 국력, 자립, 주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였다(전통적 국가주의 노선). 이들은 독자적인 군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편무(片務)적이고 비대칭적인 안보조약 체결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한 관료 출신 정치가들은 패전국 일본의 활로를 산업과 무역을 통한 경제부흥에서 찾고자 하였다(경제중심주의 노선). 五百旗頭真編. 2014. 『戦後日本外交史(第3版補訂版)』, 東京: 有斐閣, p. 284.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불가결하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아베는 당선 초기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행헌법 하에 후방지원의 범위 내에서의 행동의 전제가 되는 집단적 자위권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헌법 개정 이전의 문제라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이 있기에 나중에 헌법 9조 개정 없이 안보법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베는 개헌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 저는 세 가지 이유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헌법은 GHQ가 단기간에 작성되어 그것을 일본에 강요한 것이라는 것, 다음으로 쇼와(昭和)에서 헤이세이(平成)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시간은 변하고 9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条文)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려는 크리에이티브한 정신에 의해서만이 우리들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

아베는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도 미국을 지지. 자위대파견에 관해서도 민주제를 정착시킨다는 '대의'와 석유확보라는 '국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세계 속의 미일동맹'이란 미일 안보조약에 의한 미일 간의 유대감, 동맹관계를 세계의 모든 장면에서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세계에서 일본의 국익 실현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구축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서술한 서적)

아베의 주장은 방위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성립하였다.[16] 그 중에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7]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의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의 주변 사태법을 대체하는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시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주변 사태법에서 '일본 주변'에 제한되던 후방지원의 지리적 제약이 제거되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통하여 미군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길에 접어들었다. 즉,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제3국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미일동맹이 '동맹으로써 일체화'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18]

이와 함께 아베총리는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헌법개정의 이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2020년까지 개정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가을 임시 국회에 자민당이 만든 협법개정 초안을 제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베 개헌안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현행의 헌법 9조

16) 内閣官房·内閣府·外務省·防衛省, 「『平和安全法制』の概要」. http://www.cas.go.jp/jp/gaiyou/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17) Yanghyeon Jo. 2015. "Japan's New Security Bills: Impacts on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NEA The Review of North east Asian Studies,* 7:3, Winter. ; 西原正 (監修). 朝雲新聞社出版業務部 (編集). 2015. 『わかる平和安全法制』, 朝雲新聞社.

18) 조양현. 2014. "일본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시대정신』, 봄호.

2항을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베가 2020년 9월에 사임함으로써 헌법개정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4. 아베정권과 시민사회의 연계

아베 총리의 우파 이념성향 및 정책 지향성은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를 촉진시킨 측면이 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한 헌법개정, 국기국가법, 개정교육기본법 등에 투영된 역사수정주의와 전통적 가치관은 일본 우파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일치되어 일본의 변화를 가져왔다.[19] 특히 보수 우파의 단체와 인사들은 아베와 함께 일본국민들에게 국가의식을 강조하고 외교 안보정책에서도 위기의식을 강조하여 일본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였다.[20] 일본 정치권과 우파 시민단체의 결합은 2012년 12월 제 2차 아베 정권 출범부터 보수 우파 인사들이 내각에서 두드러지게 많아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이들 대부분은 1997년에 우익민간단체가 통합하여 발족한 '일본회의(日本會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21] 2014년 9월 아베 내각 구성에서도 우파의 결합은 이어져 19명의 내각 대신 중 15명이 일본회의에 소속되어 있었다.[22]

아베 총리는 우파의 이념과 사상을 강조하면서 '전후체제의 탈각'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였다.[23] 과거에는 타부시했던 '평화헌법 개정'이나 '대등한 미일동맹'에 문제제기를 하여 아베 총리는 그 대안을 찾아 제도화하고자 했다. 본 절에서는 아베 정권과 우익 시민단체의 결합은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파 정책의 추진

19) 中北. 2014. pp. 4~5.
20) 조세영.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중일관계,", 『성균차이나 포커스』.
21) 東京新聞. 2014.7.30. 26~27면; 林博史, 渡辺美奈, 俵義文. 2013. 『「村山・河野談話」見直しの錯誤—歴史認識と「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かもがわ出版, pp. 58~60.
22) 중앙일보. 2014.9.4. "아베 내각 접수한 극우 대본영 '일본회의',".
23) 中北浩爾. 2014. 『自民党政治の変容』, NHK出版, 제4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1) 일본회의

(1) 모체로서의 '생장의 집'

1973년 6월 이세(伊勢)신궁에서 반공우파를 표방하는 신토(神道)와 불교 쪽의 보수적인 종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의 신사를 총괄하는 신사본청과 생장의 집(生長の家, 이하 생장)이 주축이었다. 생장은 1930년 다니구치 마사하루(谷口雅春, 1893~1985)가 창시했으며, 반공 애국을 내걸고 일찍부터 일본국헌법의 무효를 외쳤다.[24]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4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日本を守る会, 이하 모임)'이 발족했다. 취지문의 키워드는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민족의 연대감과 애국심"이었다.

모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이었다. 하나는 이른바 '종교우익'의 대동단결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이다. 1969년 신사본청의 외곽 정치 단체로 설립된 신토정치연맹[25]과 생장이 1964년에 만든 '생장의 집정치연합(이하 생정연)'이 연결되었고, 다수의 불교 종파가 합세함으로써 신토 중심이라는 한계 또한 뛰어넘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전전과 같이 폭력조차 불사하는 '행동우익'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조직적 동원을 지향하는 '대중우익'과 그들의 운동 방식이 도입·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26] 신사본청의 기사를 빌면, 도쿄 중심

24) 다니구치 마사하루를 신봉하거나 교류를 가졌던 정계 거물도 적지 않다. 역대 수상만 해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등이 지목된다(아오키 오사무, 『일본회의의 정체』, 율리시즈, 2017년, 87~89쪽).

25) 신토정치연맹의 현 회장은 신관인 우치다 후미히로(打田文博, 1953~)이며, 지금도 웹뉴스(http://www.sinseiren.org/index.htm)를 운영하고 있다. 1970년 5월에는 신토정치연맹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신토정치연맹국회의원간담회'가 발족되어 2017년 3월 30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던 과거 운동을 반성하고, "전국적인 활동의 확대를 기하"라는 '국민운동'을 통해, "자민당에 한정된 국회 대책에서 탈피하여 널리 여야당을 통한 협찬 체제를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려고 했다.[27] 그렇게 모임은 전후 일본에서 우익운동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모임과 우파 세력의 당면 목표는 연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원호법(元號法)의 제정이었다. 이를 위해 1978년 6월 국회의원 총 411명이 참가한 '원호법제화촉진국회의원연맹'을 조직함과 동시에 7월에는 우파 세력을 총결집하여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를 일궈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결의와 의견서 채택, 우파 단체는 물론 정치가까지 끌어들이는 일종의 '통일전선'방식을 채택했다.[28] '국민적 합의'의 형성, '국민 여론'의 조직화, 초당파 국회의원 조직을 통한 '국민적 요구'의 기정사실화 등을 체계적으로 시도했으며, 법안이 제출되자 2만 명 규모의 전국 집회(국회의원 318명이 출석)를 개최하는 등 정치적 압력을 가한 끝에 1879년 6월 원호법이 중참 양원을 통과했다.[29]

원호법 제정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대중우익 혹은 통일전선 방식은 생장 계열 학생운동의 당사자와 그들의 경험이 도입되면서 창출되었다. 먼저 언급할 사람이 '참의원의 교황'이라 불렸던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1932~)와 현재 일본회의 사무총장인 가바시마 유조(椛島有三, 1945~)이다. 무라카미는 생정연의 활동에 더해 모임의 초기부터 사무국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생장 출신 학생운동가 OB 그룹이 만든 일본청년협의회를 끌어들였다. 1970년 설립된 일본청년협의회는 위원장이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1947~), 현 참의원 의원이자 수상 보좌관이었으며, 가바시마는 서기장이었다.[30]

---

[26] 堀幸雄. 1993.『戦後の右翼勢力(増補版)』, 勁草書房, p. 224.
[27]『神社新報』, 1977.1.17.호.
[28] 成澤宗男. 2015.「日本会議のルーツと国家神道—価値同一性強要の戦後的変容に見る神道勢力の陥穽」,『「開戦前夜」のファシズムに抗して』,かもがわ出版, pp. 78~80.
[29] 俵義文. 2016.『日本会議の全貌』, 花伝社, p. 21.

1977년 가바시마를 위시한 일본청년협의회 멤버들이 모임의 사무국에 발을 들였다. 뒤이어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가 출범하자 가바시마는 사무국장이 되었고,[31] 무라카미와 가바시마는 이른바 '이인삼각'의 기세로 원호 법제화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결의 운동을 비롯하여 '주민운동' 내지 '풀뿌리운동'의 형태를 띤 여러 활동을 견인해 나갔다. 그 2년 뒤에 원호법 제정이 성사되었다.

생장이라는 공통분모는 지금도 보수우파 단체의 지도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청년협의회 정책부장으로 생장 청년회를 이끌고 있으며, 아베 신조의 유력 브레인으로 지목되는 이토 데쓰오(伊藤哲夫, 1947~) 일본정책연구센터 대표,[32] 생장 계열 동아리의 임원으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헌'이라 용인하는 3명의 헌법학자 중 1명인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1946~), 역사교과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1950~)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3명 모두 일본청년협의회의 산파역이기도 했다. 전후의 새로운 대중우익 대두와 조직화는 물론 정계와의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은 생장과 그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원호법 제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된 뒤,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는 1981년 10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国民会議, 이하 국

30) 일본청년협의회는 2005년 참가 범위를 넓혀 일본협의회를 결성했으며, 홈페이지(http://www.seikyou.org/nihonkyogikai.html)에서는 '일본청년협의회·일본협의회'라는 명칭을 표방하고 있으며, 일본청년협의회 시절부터 회장은 가바시마가 차지하고 있다. 관련 단체로는 교사 조직으로 일본교육연구소(1974년), 연구자가 중심인 일본문화연구소(1975년), 정치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정치경제연구소(1992년)가 있다.

31) 가바시마를 비롯한 일본청년협의회 멤버들은 초창기에 오다무라 도라지로(小田村寅二郎, 1914~1999)가 만든 국민문화연구소(1956년 설립)의 지도를 받았으며, 오다무라는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와 그 후신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에서도 대표위원으로 참가했다.

32) 정계 입문 초기에 이토에게 아베 신조를 소개한 사람은 에토 세이이치였다고 한다(문예춘추의 웹진 http://gekkan.bunshun.jp/articles/-/530, 2018년 10월 22일 조사).

민회의)'로 재발족했다. 초대 의장은 UN대사를 역임한 가세 도시카즈(加瀬俊一, 1903~2004)였고, 가바시마는 사무국장으로 실무진을 이끌어갔다. 일본인의 손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안보, 일본의 전통과 접목되는 교육, 헌법의 개정을 내걸었으며, 재계와 학계, 문화계의 보수파가 결집한 우익운동의 매머드 단체였다.

국민회의가 출범한 이듬해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1982년 검정 과정에서 한국의 3.1운동은 '폭동'으로 기술되고 제국주의 침략은 '진출'로 수정하게 한 것이 보도되어,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까지 반발하는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은 '근린제국조항'[33]을 발표하며, 한국과 중국에 교과서 기술상의 배려를 약속하는 선에서 출구를 모색했다. 나카소네 정권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한 국민회의는 '교과서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를 만들었고, 후신인 '역사교과서편찬위원회'는 기술 내용의 검정을 놓고 문부성과 충돌을 거듭한 끝에, 1986년 고교용 『신편일본사』를 발행했다(32개교 8,900부 채택). 『신편일본사』는 이후에도 발행을 이어갔고, 2002년부터는 출판사를 메이세이샤(明成社)[34]로 바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생장 교단 자체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1983년 8월 국민회의를 탈퇴하고 생정연을 해산하며 정치 운동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35] 최근의 생장은 그 동안의 생태주의 리버럴에서 한 걸

[33] 1982년 8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관방장관 담화에서 언급하여 동 11월 '교과용 도서검정기준'에 "근린 아시아 제국 간의 근현대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34] 메이세이샤는 지금도 일본회의 관계자의 저술을 다수 간행하고 있으며, 초대 사장은 국민회의의 대표위원을 거쳐 일본회의 부회장과 고문을 지낸 이시이 고이치로(石井公一郎, 1923~), 2대 사장은 이시이의 오랜 지기인 오다무라 시로((小田村四郎, 1923~2017, 오다무라 도라지로의 동생)가 맡았다.

[35] 생장의 탈정치화 선언은 생정연의 창립부터 내걸었던 우생보호법(임신 중절의 금지) 제정이 좌절되면서 자민당을 불신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얘기된다.

음 더 나아갔다. 2016년 6월 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헌주의를 경시하고 원전 재가동을 강행하는 "아베 신조(安部晋三) 수상의 정치 자세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 함과 동시에, "일본회의가 주장하는 정치 노선은 생장의 집의 현재 신념과 방법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며, 확실히는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36]

(2) 일본회의의 결성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정계는 '위안부'를 위시한 역사 문제의 대두와 쟁점화에 시달려야 했다. '고노(河野) 담화'가 발표된 것이 1993년 8월 4일. 그 닷새 뒤에는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자민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했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연립 내각이 닻을 올렸다. 새 수상은 취임 기자회견 석상에서 과거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식한다는 견해를 당당히 피력했다.

국민회의, 일본유족회 등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정치권도 맞대응에 나섰다. 8월 23일 자민당 내의 보수파는 야스쿠니 신사 관련 3개 협의회를 중심으로 "도쿄재판으로 오염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한다며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37] 약 20회에 걸친 회합에는 이후 역사교과서 분야의 전담자로 활동하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1935~)와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등이 강사로 초빙되었고, 그 결과를 모아 199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의 총괄』을 출간했다. 이제 과거의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 당당하게 선언되었다. 초선 의원으로 '친미보수의 프린스'라 불리던 아베 신조 또

[36] 생장의 집 홈페이지 (http://www.jp.seicho-no-ie.org/news/sni_news_20160609.html, 2018년 10월 29일 조사)에 전문이 실려 있다.

[37] 藤原彰·森田俊男. 1996.『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大月書店, pp. 19~20.

한 위원회의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1994년 6월 출범한 사회당·자민당의 연립 정권 하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은 공약으로 '부전결의'의 채택을 언명했다. 재차 자민당 보수파의 대응이 빨라졌다. 12월에는 '망언 제조기'라 불렸던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 1913~2016)를 회장으로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이 결성되어(아베는 사무국장 대리) 국민회의와 보조를 맞춰 부전결의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부전결의는 간신히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참의원에서는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 등의 저항에 부딪쳐 제출조차 좌절되었다.[38]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은 1996년 6월 '밝은일본·국회의원연맹(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또한, 1997년 2월 역사·검토위원회의 후신으로서 5선 이하의 국회의원 87명이 모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 이하 역사모임)'이 꾸려졌다. 간사장은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였고, 오쿠노 세이스케로부터 "역사왜곡의 '영재 교육'을 받고 리더 격이 된"[39] 아베 신조는 사무국장으로 발탁되었다.[40] 역사모임은 문부성 관료와 교과서 회사 관계자, 연구자 등을 불러 빈번하게 연구회를 열었는데, 특히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41]

---

38) 무라카미는 가바시마와 일본청년협의회를 위시한 부전결의 저지 세력의 압박 끝에 참의원에서는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스가모 다모쓰, 『일본 우익 설계자들』, 살림, 2017년, 65~66쪽).

39) 「戦後70年」, 『赤旗』2015년 1월 17일.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넷 21(子供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전 사무국장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의 발언이다.

40) 역사모임은 2004년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으로 개명하여 지금에 이른다.

41) http://chushingura.biz/p_nihonsi/episodo/epi_ndx_box/tukurukai02.htm (2016년 10월 3일 조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편, 1997, 『歴史教科書への疑問: 若手国会議員による歴史教科書問題の総括』를 참

그리고, 1997년 일본 우익운동의 또 다른 빅뱅이 시작되었다. 모임과 국민회의가 통합되어 명실상부하게 "전국에 풀뿌리 네트워크를 가진 국민운동 단체"(홈페이지의 표현)로서 일본회의가 출범한 것이다.

통합의 이유로는 두 가지가 지적되곤 한다.[42] 먼저, 자민당의 정권 독점이 막을 내린 후 초래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의 결과물이었다. 현역 수상이 침략전쟁을 입에 올리고, 국회에서 사죄 결의가 성사되면서 보수의 재결집이 부르짖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호소카와(細川) 내각과 협력한 공명당 및 창가학회에 대한 견제 심리였다. 모임의 주력인 신사본청과 여타 종파, 보수파를 규합하여 1994년 6월 '4월회'[43]가 결성되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일본회의의 발족이 결행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자면, 모임과 국민회의의 내실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모임은 종교와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인 탓에 결정력이 부족했고, 국민회의는 학자나 문화인이 주류여서 활동보다는 담론에 빠지기 쉬웠다(成澤2016:62). 양 단체를 묶고 원호법 제정에서 증명된 풀뿌리 우익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꾸려진 새 사령탑이 바로 일본회의였다.

초대와 2대 회장은 쓰카모토 고이치(塚本幸一, 1920~1998, 의류기업 와코루 회장)와 이나바 고사쿠(稲葉興作, 1924~2006,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와 같이 기업인이었다. 3대 회장은 대법원장인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낸 미요시 도루(三好達, 1927~)이며, 현 회장은 정치학자 출신인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1933~)이고, 일본의 저명한 보수우파는 대표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바시마는 변함없이 사

조할 수 있다.

42) 藤生明. 2018.「日本会議と葦津珍彦」,『現代宗教 2018』, p. 92. 무라카미 마사쿠니의 주장이다.

43) 4월회는 2001년 해산되었는데, 1999년 10월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2차 내각부터 공명당이 연립정권에 가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무총장으로서 일본회의 운영의 중추 역할을 짊어지고 있으며, 일본청년협의회 결성 시에 편집국장이던 마쓰무라 도시아키(松村俊明)가 사무국장에 앉아 있다. 일본회의 본부는 가바시마가 회장인 일본청년협의회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입주해 있다.

일본회의는 무엇보다 탄탄하고 광범위한 조직력을 지닌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국 네트워크의 경우,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9개의 블록,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본부, 252개의 지부가 있다. 중앙 본부의 임원은 총 400명, 지방 임원 3,100명에 회원이 4만 명에 이른다. 2007년 10월에 설립된 '일본회의지방의원연맹'의 가입자는 발족 초기 1,000여명 정도에서 점점 증가하여 1,800명에 육박하며, 34개 도도부현에 관련 조직이 만들어졌다. '여성에 의한 국민운동'을 위해 2001년 9월 '일본 여성 모임(日本女性の会)'이 설립되었으며, 2004년 4월에는 '일본회의경제인동지회'[44]를 출범시켜 약 100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3) 일본회의의 활동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30일 닻을 올렸다. 전날에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모리 요시로(森喜朗) 등의 자민당의 실력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가 결성되었다. 처음 189명이던 간담회 소속 국회의원은 2016년 12월 시점에 290명을 헤아리기에 이른다.

설립 총회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115명이었

44) 가입자는 재계의 거물이라기보다 중소기업의 사장이 주류인데, 세간의 화제가 된 모리토모(森友)학원 전 이사장(籠池泰典)과 비슷한 이미지라고 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업원을 동원하여 보수 정치가의 선거를 돕거나 개헌에 관한 서명 활동을 담당하는 우파적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安倍首相の精神的支柱 改憲実行部隊となる「日本会議経済同志会」とは」, 『週刊朝日』2017년 12월 29일호).

고,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입회자는 204명에 이르렀다.[45] 초대 회장은 자민당의 중진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宣伸)였으며, 사무국장은 자민당의 참의원 의원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1943~)였다. 고야마는 생장 출신으로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의 비서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여 참의원 의원을 1기 지낸 인물이다(후술).

간담회는 일본회의와 일본의 우경화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다. 국회의원 조직 중 하나인 간담회에 300명 가까운 중·참 국회의원이 결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의 하나는 소선구제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우정(郵政) 선거'가 전형적이었듯이, 공천은 당선의 실질적인 보증수표였으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자민당의 핵심 인사가 관여하는 의원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헌금하거나 파티권(정치자금 파티의 초대권, 인용자)을 사주지는 않으나, 이 간담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보수 의원이라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당내에 퍼져 있다"는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의 언급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46]

일본회의 또한 선거와 직결되는 위상의 제고를 노려 지방 조직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홍보 담당자의 얘기에 따르면,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후보를 키우자는 목표"하에 중의원의 모든 선거구에 해당되는 300곳에 지부를 만들 계획이었다고 한다.[47]

일본회의의 홈페이지 중, '국민운동의 발자취'는 다음의 항목들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9년의 원호 법제화, 1986년의 『신편일본사』 검정 합격, 1999년의 국기·국가법 제정, 2006년의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성 승격, 2007년의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다. 이

45)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앞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33~34쪽을 참조했다.

46) 『Friday』. 2014.8.22. 「安倍政権を完全支配する「日本会議」の正体(根底から暴く!)」, 講談社.

47) 위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46쪽.

런 작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호 법제화의 성공 모델이 충실히 계승되고 있다.

① 일본회의의 개별 목표와 대상자를 맞춰 별도의 단체를 각지에 만든다. 따라서 가입 회원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② 먼저 지방 조직을 띄운 다음 목소리를 중앙으로 발신하는 풀뿌리 운동을 실시한다.
③ 각 조직 별로 이벤트나 공부 모임 등을 거듭해 가면서 동원수를 늘여나간다. 이와 더불어 득표를 시사하며 지방의원을 끌어들이는 작업도 가미한다.
④ 일본회의 차원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중앙 회원의 힘을 활용하여 정부 여당 쪽에 압력을 가한다.

일본회의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국민운동'으로 12개 범주를 제시해 놓았다.[48] 이를 다시 분류하면 개헌, 황실, 역사·교육, 야스쿠니, 안전보장(영토), 여성(젠더프리·부부별성 반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를 전담하는 다양한 단체를 '별동대'로 거느리고 있다. 아울러 단체의 임원은 이른바 기업의 '순환출자'를 방불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개헌에 관한 단체가 가장 다채롭다. 제일 먼저 2001년 11월 '「21세기 일본과 헌법」 유식자 회의(민간헌법임조)'가 설립되었다. 초대 대표는 미우라 슈몬(三浦朱門, 1926~2017)이었으며, 현재는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코(桜井よしこ, 1945~)가 대표를 맡

48) 다와라 요시후미는 일본회의가 9개의 '야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헌법 개정이며, 교육, 방위가 뒤따르는데, 국민회의 시절 내걸었던 슬로건인 안보, 교육, 개헌의 후신에 해당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황실 숭배, '도쿄재판사관'의 극복, 부부별성 반대, 국가의 회복 등이다(俵義文, 『日本会議の野望』, 花伝社, 2018년, 30~68쪽).

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법조사회가 만들어진 것에 맞춰 민간에서의 맞불을 놓기 위해 단체를 꾸렸던 것이다. 2014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美しい日本の憲法をつくる国民の会, 이하 헌법모임)'의 공동대표는 사쿠라이와 일본회의 3·4대 회장인 미요시(三好)와 다쿠보(田久保)이며, 간사장은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사무총장은 신토정치연맹 회장인 우치다 후미히로(打田文博), 가바시마가 사무국장이다(자세한 사항은 후술).

황실 문제 중, 최근의 쟁점은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도록 하는 '여성 궁가(宮家)'문제와 점령 통치 시절에 폐지된 11궁가의 복원 문제이며, 아베 수상은 여성 궁가에 반대하고, 구 황족의 복귀에는 긍정적이다. 관련된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2012년 5월 '황실의 전통을 지키는 국민모임(皇室の伝統を守る国民の会)'이 발족했다. 사쿠라이가 대표 발기인이었고, 미요시는 회장을 맡았으며, 우치다가 사무총장을 차지했다.

메이지(明治) 천황의 탄생일인 11월 3일은 패전 후 '문화의 날'로 바뀌었는데, 다시 '메이지의 날'로 개명하자고 주장하는 '메이지의 날 추진협의회'도 2015년 11월에 생겨났다(2007년부터 4월 29일은 '녹색의 날'에서 '쇼와(昭和)의 날'로 변경). 회장은 민사당에서 자민당으로 돌아선 쓰카모토 사부로(塚本三郎, 1927~)가 맡았으며, 사무총장 다카이케 가쓰히코(高池勝彦, 1942~)는 변호사이면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즉, 새역모의 현 회장이자 사쿠라이가 대표로 있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부이사장(발족 시에 사무국장)이다.[49] 그리고, 2018년 5월에 '메이지의 날을 실현하기 위한 의원연맹(明治の日を実現するための議員連盟)'이 구성되었다.

야스쿠니 쪽은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민모임(みんなで

[49]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무실의 주소는 다카이케의 변호사 사무소로 되어 있다(http://meijinohi.com 2018년 10월 24일 조사).

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民の会)'이 핵심이다. 2001년 7월 당시 고이즈미 수상이 공언했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이미 1997년 만들어진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회장 오쿠노 세이스케(奥野誠亮))과 짝을 이룬다. 참배는 물론 야스쿠니를 대체하는 국립 추도 시설 문제에 대해 일본유족회와 더불어 반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기인의 대부분은 일본회의의 대표위원과 겹친다.

여성 분야 중, 부부별성의 경우 일본회의가 출범하기 전인 1995년 12월에 결성된 '가족의 유대를 지키고 부부별성에 반대하는 국민위원회(家族の絆を守り夫婦別姓に反対する国民委員会)'가 여전히 일선에서 가동되고 있다. 2010년 3월 '국민대회'를 열어 500만 명의 국회 청원 서명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50] 사쿠라이 요시코,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 1946~), 오노다 마치에(小野田町枝, 1937~) 등이 발기인이었다. 하세가와 미치코는 철학자로서 사이타마(埼玉) 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회의의 대표위원이며, 일찍부터 페미니즘과 부부별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노다 마치에는 일본 여성의 모임의 현 회장이며, 패전 후 필리핀에서 29년 동안 유격전을 벌인 뒤 1974년 귀국한 오노다 히로오(小野田寛郎, 1922~2014)의 부인이다.

2015년 12월 16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민법의 두 규정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이혼한 여성은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헌, 부부는 동성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었다. 부부별성이 좌절된 것이다.

여기서 간단하나마 일본회의의 일상적인 운영 상황을 짚어두고자 한다.[51] 일상적인 사무나 의사결정은 사무총국, 즉 사무총장인 가바

50) https://blog.goo.ne.jp/nippon-mamoro/e/91f603a4e1f9c15d592285a40190dafa. 2018년 10월 22일 조사.

시마가 관리하며, 매년 운동 방침은 1년에 한 번 각 도도부현 대표자와 가맹단체 임원,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국이사회'를 열어 결정한다. 2,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상임이사회가 열린다. 일본회의에 대표위원을 낸 단체로 구성되며, 40~50명의 위원이 운동의 진척 상황 점검과 향후 방침을 협의·결정한다. 시사 문제에 관한 성명서나 행사의 결의문 등은 10명 정도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모모치 아키라, 종교학자인 오하라 야스오(大原康男, 1942~), 다카하시 시로 등이 참가하는 일본회의의 '이론적 두뇌'라고 칭해진다.

일본회의의 활동과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은 간담회와 함께 추진된 5주년·10주년·20주년 기념대회의 비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11월 18일, 2007년 10월 6일, 2017년 11월 27일 열렸으며, 대회의 면모를 알기 위해 말미에 참가자와 결의문을 표로 첨부했다. 그리고 일본회의가 주축이 되어 추진된 우경화의 주요 사건도 말미에 연표로 정리해 놓았다.

2) 역사교과서 문제

(1) 교과서우익의 등장

1996년 6월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실었다(고교는 1993년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국제적 쟁점화로 점화된 동아시아의 '역사전쟁'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장으로까지 번졌고, 보수파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분야를 전담하는 '교과서우익'이 처음으로 태동했다.

51)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앞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47~48쪽을 참조했다.

1996년 1월 산케이(産経)신문에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가 연재되었다. 당시 도쿄대 교수였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1943~)의 '자유주의사관연구회'가 내놓은 작품이었다. 그 해 12월이 되어 후지오카 그룹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창립 기자회견을 열었고, 1997년 1월 니시오 간지를 회장으로 새역모가 정식으로 출범했다(후지오카는 부회장).[52]

1997년 이후 새역모는 보수 언론, 특히 산케이신문의 지면을 활용하여 '자학사관'으로 물든 교과서를 공격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새역모가 편찬하는 역사교과서는 계열사인 후소샤(扶桑社)에서 발간하도록 지원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언급한 역사모임이 꾸려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참의원 의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고야마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적극 관여하여 새역모의 찬동자에 이름을 올렸고, 후지오카와 함께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역사모임의 결성에 적극 참여하여 간사장 대리를 맡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南京)대학살 등에 관한 추궁은 물론 교과서 검정과 채택을 놓고 국회에서 집요하게 거론하던 고야마를 두고 니시오는"새역모가 가장 의지하는 국회의원"이라 소개했다고 한다.[53]

역사모임은 두 권의 책을 간행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회에서의 질의응답을 수록한 저서(『歴史教科書への疑問』)를 1997년

52) 앞서 언급한 역사검토위원회에서 발제자로 나왔던 니시오, 다카하시,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하세가와 미치코(長谷川三千子) 등도 새역모에 가세했다. 참고로 새역모의 회장은 후술할 내분으로 인해 빈번하게 바뀌었는데, 니시오 간지(1997.1~)－다나카 히데미치(田中英道, 2001.9~)－야기 히데쓰구(2004.9~)－다네가시마 오사무(種子島経, 2006.2~)－다카이케 가쓰히코(2006.4~, 회장 대행)－고바야시 다다시(小林正, 2006,9~)－후지오카 노부카쓰(2007.5~)－스기하라 세이시로(杉原誠四郎, 2011.8~)－다카이케 가쓰히코(2015.10~)로 이어지고 있다.

53)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siryou_jimukyokutusin0101_koyama.htm (2018년 10월 26일 조사).

12월에 펴냈는데, 부제와 같이 '젊은 국회의원에 의한 역사교과서 문제의 총괄'을 꾀했다. 이후에도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오키나와(沖縄)전투에서의 집단사 등에 관해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거듭했고, 2008년에는 난징에서의 학살을 부정하는 저서 (『南京の実相―国際連盟は「南京2万人虐殺」すら認めなかった』)를 펴내기도 했다.

새역모의 지역 조직 만들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9년 10월 시점에는 47개 지역에 48개 지부(도쿄는 2개 지부)를 거느리는 거대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며, 회원 수는 1만 명을 넘었다. 2000년 4월에는 교과서 채택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교과서개선연락협의회'(회장 미우라 슈몬 (三浦朱門))가 출범했다.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의원연맹'은 지역에서의 채택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실상 새역모의 전성기였다.

2001년 새역모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해 137곳의 오류를 고친 이 교과서에는 가해의 노골적인 미화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의 전면화라 불러야 할 정도로 전쟁 피해의 기술이 가득했다. 하지만, 8월에 집계된 채택률은 10%의 목표는 커녕 0.039%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일본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채택 저지 운동에 한국까지 가세하면서 벌어진 결과였으며, 새역모 진영으로서는 엄연한 완패였다.

(2) 교과서우익의 분열

첫 싸움의 좌절은 새역모 내부 구성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채택전이 끝나자마자 터진 이른바, '9.11사건'으로 인해 새역모는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교과서의 집필자이자 만화가로서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 니시베 스스무(西部邁) 등이 테러를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에,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은 "사상과 정치는 별도. 사상은 반미라고 해도, 현실 정치에서는 반미를 선택할 수 없다"면서 고바야시를 비판했다.[54] 결국, 고바야시는 니시베와 함께 새역모를 탈퇴했다. 교과서우익은 반미 그룹을 축출하고 친미의 기치를 내걸음으로써, 자민당의 보수 우파와의 제휴를 지속하게 된다.

초전의 좌절을 딛고 '복수'를 외쳤던 새역모는 2005년 다시금 역사교과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재도전의 결과는 목표로 내건 10%는커녕 1%에도 못 미치는 0.39%의 저조한 채택률에 머물렀다. 연이은 참패는 새역모 내의 불협화음을 재차 현재화시켰다.[55]

구도를 간략화하면, 패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미야자키 마사하루(宮崎正治) 사무국장을 경질하는 건을 놓고 벌어진 후지오카 그룹과 야기 히데쓰구(八木秀次, 1962~)[56] 그룹과의 맞대결이었다. 법학자 야기는 일본회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2006년 초반까지 벌어진 난투극은 야기 일파[57]가 새역모를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새 회장으로 후지오카가 취임했다. 그리고 10월 야기를 이사장으로 옹립한 일본교육재생기구(이하 재생기구)가 출범했다. 11명의 고문 중 3명이 일본회의의 임원이라는 데서 자명하듯이,[58] 2차 분열의 내막은 일

54)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siryou20060314.htm(2016년 10월 4일 조사).

55) 자세한 경과는 俵義文, 2008년, 『〈つくる会〉の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의 1장을 참조할 수 있다.

56) 야기는 가바시마 등의 일본청년협의회가 초창기 감화를 받았다는 국민문화연구소에 출입하면서 오다무라 도라지로·시로 형제 및 나고시 후타라노스케(名越二荒之助, 1923~2007) 등을 통해 보수 우파와의 인맥을 넓혀간 것으로 보인다(八木秀次. 2015.9. 「我が内なる左翼との決別」, 『正論』, 産経新聞社.

57) 니시오 간지의 블로그에 따르면, 4명의 이사가 야기를 지원하는 일본회의 계열로 분류된다. 변호사 우치다 사토시(内田智, 1958~), 고갓칸(皇學館)대학 교수 닛타 히토시(新田均, 1958~), 메이세이(明星)대학 직원인 가쓰오카 간지(勝岡寛次, 1957~) 등 3명은 와세다 대학 과 생장 계열 동아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고갓칸대학 교수인 마쓰우라 미쓰노부(松浦光修, 1959~)와 함께 행동했다고 한다(http://hiro-san.seesaa.net/article/250625953.html, 2018년 10월 26일 조사)

58) 4명의 새역모 이사도 재생기구의 이사 또는 평의원으로 참가했으며, 1999년부터 200

본회의와 선이 닿은 후발 교과서우익 야기가 창립 멤버인 후지오카 그룹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독자적인 조직을 꾸린 것이었다. 새역모의 역대 회장 중 니시오를 제외한 4명이 재생기구로 옮겨갔다는 것은 교과서우익의 본류를 뒤엎는 '쿠데타'의 발생이었다.[59]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일본회의를 포함한 보수 정치권의 셈법과 연계시켜 2차 분열의 내막을 재구성하자면, '관변 학자'로서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후지오카 대신 야기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차 아베 내각 출범에 맞춰 실행 작업에 들어간 교육기본법 개정 및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끌어갈 민간의 새로운 연대체가 필요해졌다. 그와 연동하여 산케이신문은 새역모와 결별하고 재생기구를 선택했다. 자세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8월과 9월 일본의 일간지는 출범이 예고된 아베 내각의 브레인 '5인방'을 기사화했다. 재생기구를 창설하게 되는 야기 히데쓰구와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1947~)도 그 안에 들어 있었다.[60] 12월 아베 정권은 애국심 교육을 노골화한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감행했고(후술), 2007년 7월 재생기구는 자매단체로서 '개정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교과서 개선을 추진하는 유식자 모임'(이하 개선모임)을 신설했다. 역시 새역모를 탈퇴한 야야마 다로(屋山太郎, 1932~, 재생

4년까지 새역모의 부회장이던 일본회의 정책위원 다카하시 시로도 재생기구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59) 필자와 나눈 인터뷰(2018년 9월 26일 실시)에 따르면 야기는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간사이(関西) 지역에서 교과서 운동을 펼치는 우에스기 다카시(上杉聰)는 패전 수습책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라고 분석했는데, 후지오카 그룹이 교육위원회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과격한 대책을 주문한 반면, 야기 그룹은 중립성을 가장한 온건한 방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https://lite-ra.com/2016/06/post-2354_3.html, 2018년 10월 27일 조사).

60) 나머지 세 사람은 이토 데쓰오,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에 관여했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1956~, 현재 회장)와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1957~, 현재 부회장) 등이었으며, 이토가 좌장 격이었다고 한다. 또한 『문예춘추』 2013년 2월호는 나카니시와 야기 등이 총선거 압승으로 2012년 12월 출범한 2기 아베 정권의 '공정표'를 작성했다고 전한다(http://gekkan.bunshun.jp/articles/-/530, 2016년 11월 10일 조사).

기구의 고문)가 대표, 야기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재생기구는 교과서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는 별동대 조직까지 거느리게 된 셈이다.

한편, 후소샤는 2007년 5월 새역모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잇단 분열이 이유로 거론되었으나, 저조한 채택률로 인한 손실에 더해 정치적 고려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과서 관련 사업은 자회사인 이쿠호샤(育鵬社)로 이관하고, 개선모임을 새 집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다. 후지오카의 전언이 내막을 알려준다. 이쿠호샤의 변신은 후소샤의 이탈로 곤란해진 야야마가 아베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후지산케이 그룹 회장이 3억 엔을 출자하게 하여 성사되었다.[61] 산케이신문은 아베 수상의 의향에 따라 재생기구와 개선모임 쪽으로 말을 갈아탔던 것이다. 반면에 새역모는 교과서 발행을 이어가기 위해 동 9월 지유샤(自由社)와 손을 잡았다.[62]

(3) 경쟁하는 교과서 우익

새역모의 2차 분열극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야에서는 지유샤와 이쿠호샤라는 내부 항쟁과 같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새역모와 재생기구(개선모임)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교과서우익의 본류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불리를 절감한 새역모는 운동의 구심력을 유지하고자 2009년 지유샤 교과서로 선제공격을 가했다.[63] 성과는 있었다. 지유샤 교과서는 '생명선'이던 요코하마(横浜)

61) https://ssl.nishiokanji.jp/blog/?p=622, 2016년 10월 5일 조사. 월간지『자유』2008년 2월에 실린 좌담회에서 나왔으며, 후지오카는 야야마에게 들었다고 한다.

62) 양 단체의 신경전은 난징 사건의 기술을 놓고 일찍부터 표면화되었다. 2007년 9월 개선모임 측이 검정을 염두에 두고 학설상의 대립과 실태 파악의 미비 정도를 지적하겠다고 한 데 비해 새역모는 학살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비난을 가했다(俵義文. 2008. 앞의 책, pp. 45~47.).

63) 2008년 4월 새역모는 후소샤와의 결별 과정에서 기존 교과서의 저작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했고, 1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에서 교육위원회를 움직이는 필사적인 공략 끝에 1.1%의 채택률을 기록했고, 기존의 후소샤는 0.6%에 머물렀다.

2011년은 지유샤와 이쿠호샤가 교과서를 놓고 본격적으로 격돌한 첫 싸움이었다. 교과서의 완성도는 이쿠호샤 쪽이 높았다. 문부과학성의 검정 의견 내역이 이를 말해준다. '정확성, 표기 및 표현'의 오류는 지유샤가 230곳, 이쿠호샤가 145곳이었으며, 내용 이전의 단순 오류(오기, 탈자 등)는 각각 95곳과 39곳이었다.[64]

정치권의 지원사격 또한, 재생기구와 이쿠호샤 쪽으로만 몰렸다. 2011년 4월 전술한 역사모임의 임원진이 교체되었다.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를 새 회장으로 아베 신조를 고문으로 추대하자는 에토 세이이치의 제안이 승인되었고, 이어진 총회 자리에 야기가 강사로 초빙되어 교과서 채택에 관한 7항목의 요망을 제출했다.[65] 그리고 5월 아베 신조는 재생기구와 개선모임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새로운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교과서는 이쿠호샤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66] 반면에, 지유샤 교과서 쪽은 동 6월 도쿄서적의 도표를 도용한 것이 발각되어, 후지오카 회장이 사표를 던져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런 대조적인 양상은 2011년의 채택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유샤의 0.07%에 비해 이쿠호샤는 3.7%를 달성한 것이다. 지유샤

수정을 거친 뒤 2차에서 통과했다.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교과서의 발행 시도는 저작권은 물론 경영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고, 이후 후소샤와 산케이신문까지 가세한 저작권 소송이 벌어졌다. 관련된 내용은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편. 2009.『教科書レポート』52호,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pp. 30~36.이 자세하다.

64)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편. 2011.『教科書レポート』54호,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pp. 13~14.

65) 역사모임의 사무국장이 된 요시이에 히로유키(義家弘介)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yoshiie-hiroyuki.com/i-info/inf/inf.cgi?cm=2&mode=detail&year=2011&no=904, 2018년 10월 24일 조사).

66)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편. 2013.『教科書レポート』56호,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p. 31.

의 생명선 요코하마는 이쿠호샤가 차지했으며, 양 조직의 우열은 확연히 드러났다.

지유샤의 완패로 끝난 서전의 결산표는 2015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채택률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유샤는 0.04%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고, 이쿠호샤는 당초 목표 10%에는 미달했지만 6.3%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67]

이쿠호샤의 약진은 2기 아베 정권의 노골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서 비롯되었다.[68] 2014년 6월 '교육재생수장회의'라는 단체의 설립 총회가 열려 아베 수상의 맹우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축사를 했다. 90여명의 가맹 지자체장을 앞세워 이쿠호샤를 채택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듯이, 사무국은 재생기구 내부의 '교육재생을 추진하는 전국연락협의회'에 설치되었다.[69] 교육재생수장회의－교육재생을 추진하는 전국연락협의회－재생기구－일본회의의 라인에 수상과 문부과학상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교육재생수장회의 출범 10일 후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행정법이 개정되었다.

2017년 3월 초중고의 학습지도요령이 전면 개정되었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이어 교과서 내용을 검정이 아니라, 집필 단계에서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고등학교 역사 부문의 필수 과목은 세계사에서 신설되는 '역사 총합'으로 바뀌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에

67) 2015년의 채택률 상승에서 증가분의 73%를 오사카 부가 달성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일본회의의 주도면밀한 공작이 확인되는데, 상세한 분석은 上杉聡, 『日本会議とは何か』, 合同出版, 2016년, 제5장이 참조가 된다.

68) 이하의 내용은 「正念場を迎えた「戦争賛美本」との闘い」, 『週刊金曜日』2015년 6월 5일호를 참조했다.

69) 2018년 7월 20일자 류큐(琉球)신보 기사에 따르면, 교육재생수장회의는 재생기구에 '위탁비' 명목으로 연간 약 400만 엔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https://ryukyushimpo.jp/news/entry-765167.html, 2018년 10월 26일 조사).

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는 영토와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그것과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관측된다. 나아가 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향후 증폭될 것임에 틀림없다.

3)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

(1) 아베 정권의 인적 구성

일본의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원 모임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다. 역대 아베 정권과 우경화의 연결점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로 각료들이 어떤 의원모임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그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아베 내각 각료의 의원모임 현황

	1차 내각 (07.9.7)	2차 내각 (12.12.26)	3차 내각 (16.8.3)	4차 내각 (17.11.1)
간담회	9	13	16	15
역사모임	3	9	7	4
야스쿠니모임	8	15	17	17
헌법연맹	11	12	11	10
납치연맹	3	4	5	4

* 일본회의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교과서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 야스쿠니는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헌법은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 납치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의 약칭이다.
* 각료 총원은 1차 내각이 18명, 2차 내각이 19명, 3차와 4차 내각이 20명이며, 1~4차 내각 모두 개각을 실시했는데, 개각에 따른 변동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소개한 일본회의의 평가에 따르면, 1기 아베 내각의 업적은 교육기본법 개정과 국민투표법 제정에서 찾아진다. 이는 결과론적인 평가이다.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 5명의 일본 잔류 등의 '퍼포먼

스'를 통해 차기 수상 후보로서의 주가를 높여갔던 만큼, 취임 초기의 아베 수상이 짊어졌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납치 문제였다. 앞서 중에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와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가 2006년 9월과 10월 시점에서 아베 내각의 브레인 '5인방'속에 포함된 것은 아베 신조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납치 문제였다는 점과 상통한다.

1기 내각을 꾸리면서 아베 수상은 신속하게 납치 문제 담당 각료(관방장관이 겸임)와 수상 보좌관을 설치했다. 아울러, 자신이 본부장을 맡은 '납치문제대책본부'신설을 표명했으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아베 정권이 붕괴되었다. 납치문제대책본부는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 내각 때인 2009년 10월에 한층 강화된 진용으로 만들어져 지금에 이른다.

위의 표는 역대 아베 내각에서 납치연맹이 차지했던 위상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납치연맹에 가입한 국회의원 수는 2005년 185명으로 결코 적지 않았으나, 각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사모임에도 미치지 못한다. 2기 아베 내각에서도 늘지 않은 것은 납치라는 쟁점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납치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간담회, 역사모임, 야스쿠니모임 소속 각료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회의, 역사인식, 야스쿠니 참배가 아베 정권을 지탱하는 견인차임을 설명해 준다. 특히, 2기 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급증했다는 사실은 우경화와 직결되는 세 의원모임의 응집력을 극대화하면서 아베의 '귀환'이 성사되었음을 말해 준다.

반면에, 2018년 10월 13명의 각료가 교체되는 대폭 개각이 있었다. '위키피디아'의 자료에 따르면 신임 각료 중에는 간담회가 8명, 역사모임이 1명, 야스쿠니가 8명, 납치가 1명 확인된다. 유임 각료와 합친 가입자 총원은, 간담회 14명, 역사모임 3명, 야스쿠니모임 14명, 납치연맹 4명 등으로 잠정 집계된다. 각료의 의원모임 가입 현황이라

는 기준에 한정해서 봤을 때, 제4차 개조 내각은 우경화의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차 내각에 비해 제4차 내각의 우경화 정도가 다소 줄어들었는데, 그런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2) 1기 아베 정권과 교육기본법 개정

일본회의 3대 회장 미요시 도루(三好達)는 2007년 일본회의 발족 10주년에 즈음하여, 교육기본법의 개정을"일본회의가 노력한 많은 운동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성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문제는 국민회의 시절부터 활동의 중추였다. 교육기본법 개정의 선봉장은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였고, 봉화는 2000년 3월 설치된 수상의 사적 자문 기관인 '교육개혁국민회의'가 동 12월 교육기본법 개정을 결론지으면서 타올랐다. 문부과학상의 심의기관 중앙교육심의회는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고, 2003년 3월 '일본의 전통·문화의 존중',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등의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신을 제출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하듯 2000년 9월 일본회의는 '새 교육기본법을 요구하는 모임(新しい教育基本法を求める会)'을 결성했다.[70] 회장에는 '미스터 반도체'라고 불리던 이와테(岩手) 현립대 총장인 니시자와 준이치(西沢潤一, 1926~2018)가 사무국장에는 다카하시(高橋)가 임명되었으며, 교육개혁국민회의에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이 제출될 직전인 2003년 1월에는 조직의 몸집을 한층 키운 '일본의 교육개혁 유식자 간담회'(민간교육임조)를 결성했다. 회장의 배턴은 니시자와가 이었으나, 고문 8명, 부회장 5명, 운영위원장(다카하시 시로)와 사무

[70] 이하의 내용은 俵義文. 2004.「教育基本法の「改正」を目論むひとびと」,『世界』, 4월호를 참조했다.

국장(가쓰오카 간지) 외에 대표위원 68명과 협력위원 157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단체였다. 창립 대회에서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두 전직 수상의 메시지가 낭독되었다.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이 발표되자, 민간교육임조는 즉각 높이 평가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 다음은, 일본회의의 전매특허인 '국민운동' 차례였다.[71] 민간교육임조라는 중앙 조직이 만들어지면 신사본청 등의 협력을 얻어 파상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걸쳐 지방의회의 결의나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동조하는 국회의원을 규합하여 2004년 2월 초당파의 의원모임인 '교육기본법개정촉진위원회'(가입자 중참의원 380명)를 발족하여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나갔다.

자민당과 간사장 아베 신조도 국민운동의 본격화에 보조를 맞춰 엄호사격에 들어갔다. 2004년 5월 아베 신조는 자민당의 지방 조직 앞으로 '교육기본법의 조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을 촉구하는 '간사장 통지'를 발송했다.

교육기본법 개정 요망서를 제출한 뒤, 법안이 성립될 때까지 6년 동안 일본회의의 '풀뿌리 운동'은 놀랄 만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자만 해도 360만 명을 모았고, 국회의원 찬성자는 380명, 지방의회의 결의서 채택은 37개 도도부현, 420개 시정촌에 달했으며, 8차례에 이르는 국민집회를 개최하며 기세를 올렸다.[72]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29일 도쿄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대회'가 열렸다. 단상에는 대량의 서명지가 쌓여 있었다. 아베 신조 간사장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을!'이라 적힌 머리띠를 맨 채,

71) 이하의 내용은 앞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pp. 195~199.을 참조했다.

72) 일본회의 홈페이지의 관련 기사 (https://www.nipponkaigi.org/activity/archives/1023, 2018년 10월 28일 조사)

단상에서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은 자민당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호소했다.

2006년 4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내부 검토회에서는 애국심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도"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키워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할 것"이라는 문구로써 합의에 도달했다. 고이즈미 내각은 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아베 내각 성립 직후인 2006년 11월과 12월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었다.

정부 수정안이 확정되자 일본회의는 '애국심의 명기', '종교적 정서 함양의 명기', '부당한 지배'의 해석 변경'등 3곳의 수정을 요구하며 막바지 활동을 벌였다.[73] 마지막 항목은 법령에 따른 교육 행정이 '부당한 지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였다. 여야당 192명의 찬동 서명을 받으며 움직였으나, 국회 답변에서 취지를 살리겠다는 답변을 듣는 데서 그쳐야 했다. 일본회의 자체의 평가로는 "공명당을 배려하는 자민당과, 여당과의 대결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민주당 집행부가 서로 타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일본회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을까? 전신인 국민회의 시절부터 교육은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떠올려도 좋지만, 보다 정확한 답은 미요시 도루가 알려준다. "지금의 일본인 그대로로는 적정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먼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의식을 바로잡은 다음 헌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正論』 2007년 11월호)는 정리가 압축적이다.[74] 교육기본법 개정은 일

[73]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앞의 일본회의 홈페이지의 관련 기사(https://www.nipponkaigi.org/activity/archives/1023)를 참조했다.

[74] 朝日新聞. 2016.12.16.「日本会議をたどってII, 5教育基本法改正その先に憲法」.

본회의에게 사실상 개헌의 '전초전'으로 자리매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2기 아베 정권과 개헌

1기 아베 정권이 탄생한 다음 2007년 6월 가바시마는 한 강연에서 향후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베 정권이 발족한 후로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일본회의가 '저지 운동', '반대 운동'을 하는 단계에서 가치와 방향성을 제안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75]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가치와 방향성을 응축하는 사안이 다름 아닌, 헌법 개정이라는 점을 놓칠 수 없다.

헌법 개정은 패전 후, 일본 보수우파의 오랜 염원이지만, 아베 내각의 출현을 그 꿈의 현실화를 점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1기 내각에서 2007년 5월에 개헌에 필수적인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었고, 중참 양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었다. 1982년부터 거의 매년 5월 3일의 헌법기념일에 맞춰 심포지엄을 개최해 온 일본회의로서는 개헌이 처음으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2기 아베 내각의 출범으로 일본회의는 개헌을 향한 재출발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활동은 헌법모임 즉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이하 헌법모임)의 발족이었다.

2014년 10월 1일, 개헌을 향한 풀뿌리 운동의 개시가 선언되었다. 헌법모임의 공동대표는 사쿠라이 요시코와 더불어 당시 일본회의의 회장 미요시 도루와 대표위원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였고, 부회장 다나카 쓰네키요(田中恆清, 1944~)가 대표 발기인을 자임했다. 설립 총회에 달려온 에토 세이이치 수상 보좌관은"아베 내각은 헌법 개

75) 앞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202쪽.

정을 위해 성립되었습니다. 마지막 스위치를 누를 때가 다가왔습니다."며 감사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76]

여기서 사쿠라이 요시코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자. 헌법모임의 공동대표 사쿠라이는"우파의 성녀 혹은 상징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이다.[77] 말미의 첨가한 일본회의 10주년·20주년 대회에서 그는 연사로 등장할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는데, 그런 변화의 전기는 2007년 12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설립한 데서 찾아진다.

연구소의 취의서는 설립의 계기가 1기 아베 내각이 '어이없이' 좌초하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아베 내각의 실각을 낳은 원인이기도 한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놓고 사쿠라이는"헌법 개정 등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가 등한시되었고, 그 결과, 국가로서의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78] '국가 의식의 결여', 자위대는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는 동떨어진 현실을 타개하는 '싱크탱크', 이것이 연구소의 출발점이자 일본회의와 같은 운동체의 보완재로서 절실한 기능이다. 또한, 연구소의 '중핵'으로 국제정치학자 출신인 다쿠보 다다에를 부이사장으로 영입한 데서도 일본회의의 국수적 성격을 완화하는 국제주의의 표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셈법이 읽힌다.[79]

헌법모임이 출범함으로써 일본회의의 전가의 보도, 지방에서 중앙

---

[76] 위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p. 215.

[77] 위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p. 212. 사쿠라이는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을 2014~2016년 맡았고, 천황의 생전 퇴위를 논의하는 '유식자회의'에 전문가로서 초빙되었다.

[78] https://jinf.jp/about/prospectus, 2018년 10월 28일 조사.

[79] 사쿠라이의 개인 홈페이지(https://yoshiko-sakurai.jp/2008/01/31/664, 2018년 10월 28일 조사)에 『주간신조』2008년 1월 31일호에 실린 칼럼 '우리는 왜 '국기연 '을 만들었는가(私たちはなぜ「国基研」を作ったか)'가 수록되어 있다. 연구소도 일본회의 관련 단체와 마찬가지로 순환출자의 형태를 띤다(홈페이지의 약력에는 일본회의와의 관련성은 삭제되어 있다). 다쿠보 다다에와 다카이케 가쓰히코가 부이사장, 이사로는 오하라 야스오, 다카하시 시로, 모모치 아키라, 야야마 다로, 니시 오사무(西修, 고마자와 대학 명예교수) 등이 있다.

으로의 슬로건에 입각한 활동의 출발선이 마련되었다. 2013년 11월 일본회의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개헌 의견서를 촉구한다는 운동 방침을 결정했고, 이를 받아 이시카와(石川) 현의회 의원은 2014년 2월 현의회에서 의견서 채택을 성사시켰다.[80]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1,000만 찬성자 확대 운동'을 위해서는 신사본청과 전국의 신사가 전면적인 협력 태세에 들어가 경내에서 서명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 결과를 일본회의는 홈페이지에서 자랑스럽게 내걸었다. 2017년 11월 10일 현재 서명자 9,898,012명, 국회의원 서명 376명, 지방의회 결의 36도부현과 64시정촌, 개헌을 위한 '현민 모임' 47도도부현 결성 등이다.[81]

2016년 7월 10일의 참의원 선거는 개헌파에게 2/3를 넘는 의석을 안겨주었다. 선거 결과는 개헌 진영을 한껏 고무시켰다. 일본회의 사무총장 가바시마는 "7월 10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것, 우리는 달라진 새로운 세상에 있다"며 때마침 G7의 정상들이 이세 신궁을 정식 참배한 것과 결부시켜 '신업(神業)'이라는 감회를 토로했다.[82]

2017년의 헌법기념일에 아베 수상은 2012년의 자민당 개정 헌법 초안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개헌의 '연착륙'을 도모한 것이다. 아이디어 제공자로 이토 데쓰오가 지목되었다. 이토는 일본정책연구센터의 기관지(『明日への選択』) 2016년 9월호에 '『2/3』 획득 후의 개헌 전략'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83] 9조 3항에 "단 전 항의 규정은 확립된 국제법에 근거한 자위를 위한 실력 보유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자는 것이었다.

스스로도 '고육지책'으로 표현한 이른바 '가헌(加憲)'의 주장은 매

80) 『しんぶん赤旗』. 2016.2.7. 「「改憲」意見書 33都府県議会で採択」.
81) http://www.nipponkaigi.org/pdf/20years_history.pdf, 2018년 10월 28일 조사.
82) 앞의 논문, 「日本会議と葦津珍彦」, 108쪽.
83) 앞의 논문, 「日本会議と葦津珍彦」, 100~103쪽.

우 전략적이다. "현행 헌법이 근본부터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역시 반대 세력으로서는 감정적으로도 물러설 수 없게 되고, 여론을 양분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정면 대결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다는 냉정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84]

2018년의 헌법기념일 집회에서도 새로운 뉴스가 전해졌다. 원래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개헌파들은 헌법기념일인 5월 3일을 중심으로 각각 집회를 열었는데, 2018년에는 연합이 시도되었던 것이다.[85]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수상이 이끄는 '신헌법제정의원동맹'[86]과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민간헌법임조'의 연계가 눈길을 끈다. 2018년 5월 3일 민간헌법임조가 주최하는 집회를 신헌법제정의원동맹이 '후원'하며, 신헌법제정의원동맹이 여는 5월 1일 집회에 일본회의 회장인 다쿠보 다다에가 기념 강연을 하는 방식이 취해졌다. 또 하나는, 일본회의의 전위 조족인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과 민간헌법임조가 5월 3일 제20회 공개 헌법 포럼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국회 발의를!'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개헌론자들은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획득을 위해 3,000만 표의 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1,000만 찬성자는 3,000만 표를 얻기 위한 '국민 네트워크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000만 표는 호헌파로서도 같은 목표여서 2017년 9월 '아베 9조 개헌 NO! 전국시민액션'이라는 단체를 발족하여 3,000만 서명을 통해 개헌 움직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87]

---

84) 이토 데쓰오와 일본정책연구센터가 개헌의 어젠더 설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의 분석은 앞의 책, 『일본 우익 설계자들』, 144~171쪽에 자세하다.

85) 『赤旗』. 2018.4.30. 이하 마찬가지.

86) 1955년 7월 결성된 자주헌법기성의원동맹이 모체로 2007년 3월 개칭했으며, 비의원으로 구성된 '새 헌법을 만드는 국민회의'(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 기시 노부스케를 회장으로 1969년 설립, 현 회장 清原淳平)와 자매조직이다.

87) http://www.anti-war.info/shomei/, 2018년 10월 28일 조사.

중참 양원의 2/3를 개헌파가 차지한 지금, 남은 관문은 국민투표이다. 일본회의가 보여준 가장 뚜렷한 특징이자 강점인 보수우파를 아우르는 대중운동의 진면목이 물어지는 대목이다. 동시에 아베 내각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기도 하다. 가바시마가 일본협의회·일본청년협의회 기관지인 『조국과 청년』(2015년 5월호)에서 "만약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NO'한다면 아베 총리는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중략]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기회를 확실히 잡도록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는 결의를 밝힌 것도 무리가 아니다.[88]

2019년의 통상국회 내지는 그 전후의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헌법개정안이 제출된다면 개헌파, 호헌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외길수순을 밟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베 정권의 명운은 물론 일본의 미래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4) 일본 우익단체의 실체와 미래

2016년 일본의 출판계에서는 일본회의를 파헤친 저작이 봇물 터진 듯 간행되어 외신의 주목까지 끌었다. 저자들 모두 아베 정권과의 접점에 주목하면서, 일본회의의 정치적 위상은 실로 막강하다고 평가한다. "아베 내각을 지배하는 일본회의",[89] "권력의 중추에 자리하여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지니고 있다".[90] "아베 정권은 일본회의 정권",[91] "일본회의와 간담회는 이른바 두뇌와 수족과 같은 관계"[92] 등

[88] 앞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pp. 217~218.
[89] 앞의 책, 『일본 우익 설계자들』, 20쪽.
[90] 앞의 책, 『日本会議とは何か』, 19쪽.
[91] 俵義文. 2016.「安倍政権を支える日本会議と「日本会議議連」」, 成澤宗男 편저, 『日本会議と神社本庁』, 金曜日, p. 207.
[92] 山崎雅弘. 2016.『日本会議—戦前回帰への情念』集英社新書, p. 20.

이 그러하다. 과연 그 실태는 어떠할까?

(1) 일본회의의 실태

일본회의를 놓고 '일본 최대의 우익 단체'라고 보는 시각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 '최대'는 보수우파 명망가의 총본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헌 등에 관한 활동의 빈도와 규모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대규모 집회의 연금술과 새 활동가의 충원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통해 일본회의의 실상에 다가서 보기로 하자.

2015년 11월 10일 헌법모임은 '개헌 1만 명 대회'를 개최했다.[93] 참가자의 대부분은 일본회의에 가맹된 종교 단체에서 관광버스로 온 사람들이었으며, 일반 참가자는 지극히 미미한 숫자였다. 참가자는 고령자가 많아서 다른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다. 즉, '개헌을 요구하는 다수의 시민'은 각종 교단과 일본유족회를 비롯한 여러 보수 단체에서 '동원'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대회 현장에는 대학생 정도의 진행 요원이 많았다. 그들은 보수 계열 대학생 동아리의 연합체인 '전일본학생문화회의'(1969년 결성)와 연결되어 대학에서 강연회 개최와 집회를 열며, 상위 조직인 일본청년협의회에 소속되어 각종 이벤트에서 활동을 한다. 생장 교단과 갈라선 분파 조직(후술)이나 보수적인 동아리를 통해 청년 세대를 충원하며, 그들 중에는 특히 과거 활동가의 2세와 3세가 많다.[94] 위의 개헌 대회 참가자의 면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

93)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앞의 책, 『일본 우익 설계자들』, 109~141쪽을 참조했다.

94) 가바시마의 딸은 과거에 전일본학생문화회의에서 활동했으며, 새역모의 전 사무국장과 재생기구의 상무이사인 미야자키 마사하루(宮崎正治)의 아들도 일본청년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도출되는 일본회의의 조직 원리는 통상의 대중운동이 지향하는 외연의 확대와는 거리가 먼 듯 보인다. 개인과 단체의 네트워크를 매개로 응집력이 창출되고 작동되는 '이너 서클'의 특성이 강한 것이다. 도쿄 스기나미(杉並) 구의회 의원으로서 일본회의 도쿄도 본부 이사와 일본회의 수도권 지방의원간담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여성의 사례가 전형적이다. 그는 생장 신도로서 모모치(百地)와 다카하시(高橋) 등과는 고등학생 때부터 활동을 같이 한 사이이다. 과거의 생장은 여전히 강력한 고리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생장 교단은 오래 전에 정치 운동과 결별했지만, 과거를 이어가는 분파 집단은 현재진행형이다. 다니구치 마사하루(谷口雅春)를 따른다는 명분을 내걸고 보수우익 노선을 견지하려는 '생장의 집 본류 운동(이하 본류운동)'이 그것이며, 이토 데쓰오가 교단을 벗어나 1984년 일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류운동 중에서 가장 강경한 집단이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을 배우는 모임(谷口雅春先生を学ぶ会)'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8월 19일에 닛타 히토시(新田均), 12월 16일에 가쓰오카 간지(勝岡寛次)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으며,[95] 2002년 발간된 기관지의 초대 편집인은 모모치 아키라였다.[96] 요컨대, 가바시마가 이끄는 일본청년협의회는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기치를 내걸면서 생장 교단과 결별한 분파 조직들을 '여전히' 현재적인 대중 동원과 청년 세대 충원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95) http://manabukai.org/report/category_02/category_02_2012.html, 2018년 10월 27일 조사. 가쓰오카 간지는 본류운동 계열에 속하는 신교육자연맹(1967년 법인화)의 이사이기도 하다.

96) http://hikarinoshingun.giri.jp/05-manabu-shi/0501soukan-no-ji/henshukouki.htm(2018년 10월 27일 조사). 창간호 기사 중에는 "지난 전쟁이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침략전쟁"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생장의 집은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님의 애국의 뜻을 버리고 말았다"는 구절이 있다.

한 연구자는 이런 일본회의를 vehicle이자 device라는 단어를 개재시켜 설명한다.[97] "다종다양한 보수적·애국적 지향을 가진 사람·단체를 느슨하게 묶어 협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vehicle이며, "실체보다 훨씬 커다란 국민운동으로 변모시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듯 연출"하는 고성능 프로젝터와 같은 device를 갖춘 vehicle이라고 결론짓는다. 회장 이하 임원진의 면면에서도 유사한 조직 구성 원리가 읽혀진다. 특별한 의사결정이나 통일적인 언동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최고재판소 장관인 미요시 도루를 회장으로 옹립하여, '신뢰할 만한 저명인이 있다'는 부화뇌동의 무드를 조성해 낸다.

vehicle의 조타수는 다름 아닌 일본회의의 사무국이다. "'왠지 모르게 보수 같은' 각종 교단과 단체를 모으고, '숫자'로 표면화시킨 다음 그 '숫자'를 훌륭하게 제어하는 능력을 과시해, 정치에 대한 압력으로 바꿔가"며, "개별 구성원은 노인들로 생각이 유치하고 다양할지 모르지만 이를 묶는 사무국 사람들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그러하다.[98]

그렇다면, 일본회의의 막강한 현재는 미래에도 담보될 수 있을까?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층의 노령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사무국의 CPU에 해당되는 가바시마는 이미 70대에 돌입했다. 일본회의의 전신부터 40년 동안 흔들림 없는 듯 보이는 조직력이 과연 가바시마의 부재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임원진 전체를 둘러봐도 고령화와 인적 감소의 기색은 역력하다. 2017년 9월

97) 寺田喜朗. 2017.「日本会議と創価学会—安倍政権を支えるコミュニティー」,『現代日本宗教 2017』, pp. 106~109.

98) 앞의 책,『일본 우익 설계자들』, 118쪽.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숙지한 가바시마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독선적으로 선양하지 않고 무사(無私)의 정신으로(부와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진지·성실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관계자로부터의 신뢰·신임으로 이어지며, 그 점이 협동·공존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확하다(위의 논문,「日本会議と創価学会—安倍政権を支えるコミュニティー」, 109쪽).

명예회장 1명, 고문 3명, 회장 1명, 부회장 2명, 대표위원 35명 등 총원 42명인데, 2015년 6월에는 1명, 5명, 1명, 4명, 41명 등 52명이었고, 2002년 5월에는 명예회장 없이 12명, 1명, 6명, 51명 등으로 70명이었다.

앞에서 젊은 세대 충원의 제약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넷우익 연구로 정평이 높은 후루야 쓰네히라(古谷経衡, 1982~)는 흥미로운 논지를 펴고 있다.[99] 30대 중반의 '젊은 세대'에 비친 일본회의는 '노인회'였으며, 운동 방식도 '시대에 뒤처진'것으로 보였다. "일본회의는 전자화 물결에 늦게 대응했다. 당시 넷우익이 당연하게 사용하던 동영상 프로그램이나 SNS에서의 확산을 일본회의가 사용하게 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는 지적은 일본회의의 진수인 대중운동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다. 옳고 그름의 판정은 어렵지만, 인적 구성의 폐쇄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분석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본회의의 자금력과 동원력의 실체이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자금이 풍부한 신사본청이나 메이지신궁 등의 종교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구도"[100]와 같은 식의 기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다.[101] 신사 중에서 수입이 많은 곳은 지극히 소수이며, 기관지 구독료만 해도 연간 1,000억 엔을 넘는 창가학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사본청의 대중 동원력 또한 최대로 잡아도 1만에서 2만 명 정도라고 한다. 그 점에서 보자면, 작금의 일본회의야말로 가장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

99) 이하는 후루야의 저서『日本を蝕む「極論」の正体』(新潮新書, 2018년)을 요약한 칼럼(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18/01220600/?all=1, 2018년 10월 28일 조사)에서 인용했다.

100) 앞의 책,『일본회의의 정체』, 37쪽.

101) 이하는 위의 논문,「日本会議と創価学会—安倍政権を支えるコミュニティー」, pp. 112~115.을 참조했다.

(2) 우경화의 미래

그러면 일본 우경화의 현실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우경화의 최근 실상을 둘러싸고, 저널리스트인 다카하시 아쓰시(高橋篤史)가 내린 분석은 일독할 가치가 있다.[102] 그는 일본회의의 운동에 의해 일본 정치와 사회가 '우경화'한 것이 아니라, 냉전의 종결과 중국의 대두 등으로"좌우 대립의 축이 크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결과, 우연히 거기 있던 것이 일본회의"라고 진단한다. 게다가 일본회의는 돈도 득표력도 없고 정치가에 대한 영향력도 부족한데도 일본의 리버럴은 불가항력적인 일본회의 '음모론'을 맹신하는 현상인식을 지녔다고 비판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좌파 내지 리버럴의 '과대평가'정도가 되겠지만, '음모론'이라는 키워드는 일본회의가 반박하는 핵심 논리를 구성하기도 한다.[103]

저널리스트인 아오키(青木)는 일본회의의 실체를 놓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메스를 들이댄다. "일본회의가 아베 정권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지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양자가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전후체제의 타파'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아가 결과적으로 일본회의라는 존재가 거대"해졌으며, 아베 정권은" '위로부터'의 권력 행사를 통해 '전후체제를 타파'하려고 호령"하고 일본회의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운동'으로 '전후체제를 타파'하고자 집요하게 운동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104] 우경화의 미래는 일본회의가 아니라, 아베 정권의 내실과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측면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

102) 高橋篤史. 2016.「改憲推進『日本会議』本当の実力」,『文芸春秋』, 10월호.

103) 다카하시의 분석을 산케이신문이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점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産経新聞』. 2016.9.22.「敗者の口から飛び出すリベラル衰退と陰謀論　都知事選が終わって…」.).

104) 앞의 책,『일본회의의 정체』, p. 229.

다카하시와 아오키 중에서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아오키가 언급한 일본회의와 아베 정권의 '공명'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일본회의에 '의존'하는(혹은 그렇게 보이는) 아베 정권의 등장과 장기화는, 자민당은 물론 일본 정치의 변질 내지 쇠락과 맞물린 현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 도쿄도의원에 따르면, 일본회의는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거나 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등 자민당이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묘사된다.[105] 그렇다면 일본회의와의 제휴는 55년 체제가 붕괴된 이후의 자민당이 개헌을 비롯한 '우경화'의 어젠더 끌어안기로 선회한 이상 불가피하고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회의 심층부에 내재된 '종교성' 내지 '종교심'이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이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4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묵묵히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강인함을 발휘해 왔지만, 생장의 집 내지 신토라는 종교적 측면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서 불거졌듯이 일본 헌법 속의 정교 분리라는 원리와 충돌한다.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때마다, 옹호론자들은 신토라는 종교가 아니라, 전몰자에 대한 추도라는 비종교의 차원이라고 강변해 왔던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점으로 인해 일본회의는 '일본회의 파헤치기'의 단초를 연 스가노 다모쓰(菅野完)의 저서가 출판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미 웹진에 연재되어 호평을 불렀던 스가노의 글이 서적으로 출판되기 직전인 2016년 4월 28일, 가바시마는 스가노의 저서가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소샤에 출판 중지를 요청했다.[106] 또, 일본회의

105) 위의 책, 『일본회의의 정체』, pp. 102~103.

106) 가바시마는 후소샤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으나, 스가노가 트위터를 통해 가바시마의 요청과 같은 언론 탄압에 항의한다고 공개하자 반향을 불러일으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0516_412135.html, 2018년 10월 29일 조사).

와의 관련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저서에 언급된 생장의 간부는 판매 중지와 명예 훼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7년 1월 내려진 판매 중지 가처분은 같은 해 3월 후소샤의 요청에 따른 재심 끝에 취소되었다.

사실 가바시마가 꺼려했던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일본회의 핵심부의 '과거'에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 "특정 종교단체가 일본회의의 주도권을 전유(專有)하고 있다는 의견·비판이 나오면 운동 추진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의 발로였으며,[107] 운동 방식 또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저명인을 앞세운 채, 가바시마와 생장은 무대 뒤편의 기획자 역할에 전념한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생장의 집'과 관련 학생운동에서 발원한 일본회의의 실체가 일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본회의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107) 위의 논문, 「日本会議と創価学会—安倍政権を支えるコミュニティー」, 109~110쪽. 스가노의 저서를 비롯한 관련 출판 붐과 매스컴의 기사에 대한 일본회의의 공식적인 대응은 화장인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月刊Hanada』. 2016.8. 「日本会議」批判に大反論!」) 혹은 홍보 쪽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령 일본회의 홍보부장이자 민간교육임조의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무라누시 마사토(村主真人, 1964~)는 '일본회의 「음모론」에 철저 반론! 아베 정권을 좌우하는 컬트 비판의 거짓(日本会議「陰謀論」に徹底反論! 安倍政権を牛耳るカルト批判のウソ)'이라는 칼럼을 웹진 iRONNA에 게재했으며 (https://ironna.jp/article/4026, 2018년 10월 29일 조사), 일본회의 홈페이지에도 홍보부와 다쿠보 명의의 관련 기사가 실려있다(https://www.nipponkaigi.org/opinion/archives/8397, https://www.nipponkaigi.org/opinion/archives/8392, 2018년 10월 29일 조사).

5. 결론: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

1) 일본 우경화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에서는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 시민단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 우경화의 특징은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일본 우파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아베 정권이 우파적인 성향은 일본회의의 운동과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한 측면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있다. 우선 일본 정치권에서 아베 만큼 우파적인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베는 다른 정치가들과 달리 우파적 신념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한 정치가였다. 지금까지 터부시했던 역사인식의 문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 그리고 헌법 개정까지 주장하면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아베 장기집권 시절에도 이루지 못한 쟁점(예를 들면 헌법 개정)들은 일본 정치권의 장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가 헌법개정의 논의는 지속되겠지만, 이를 실현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일본 정치사에서는 극히 드문 상황이었고, 이를 지지하는 우파 시민단체들도 아베정권과 함께 영향력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 아베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면서 아베 시대만큼 우파 시민단체들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일본회의를 보더라도 구성원들이 고령화하고 패쇄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우파 운동이 점차 정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 정치권과 일본 회의의 결합과 상호작용은 아베 정권 시

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일본회의가 지방에 침투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가들이 존재하는 한 일본회의의 영향력은 유지되면서 상당기간 성치권에 영향력을 가질 수있다. 즉 우파 시민단체는 패쇄적이고 고령화되었지만, 당분간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다. 게다가 일본 정치권에서 우파 정당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일관계의 모든 악의 근원을 아베 총리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하다. 아베 총리는 일본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고, 우파 시민단체와 결합으로 인한 우경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일본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파 시민단체들과 일본 정치권과의 감정적인 결합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일본 사회의 우경화 운동도 정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을 통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반대에 부디쳐 자신의 신념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앞으로도 일본 정치권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경계하면서도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여 우파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아베 총리의 대한 강경정책은 우파 시민단체들의 집요한 반한 운동과 비판적인 일본 여론과 결합하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다. 아베 총리, 우파 시민단체의 반한 주장, 그리고 일본 여론의 합세에 따라 일본의 분위기는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한국과 어떤 합의

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말을 바꾼다'라는 주장이 확산될 수 있었다.[108] 일본 우파로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전략 외교와 이념성향의 외교가 결합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안심감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베의 이념외교는 '외교의 정치화'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의 보수화와 더불어 아베의 장기집권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베의 이념과 전략사이이의 두 얼굴은 앞으로 일본 스가 총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아베는 자신의 최우선과제인 헌법개헌을 위해 발톱을 숨기면서, 최우선과제를 위해 자신의 장기집권과 자민당 여당의 국회 의석 2/3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본사회가 보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이념과 우경화를 받아들이기는 아직 일본사회의 복원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베 정권은 보수 우경화를 지향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타부를 붕괴시켰지만, 아직 아베의 우경화의 시도는 성공하기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베가 의도하는 대로 개헌이 되거나 우파의 인식을 밀고 나갈 만큼 아베의 지지기반이 탄탄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권이 한국과의 전략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보수 우경화는 이제 일본 내 정착되어 있다고 본다면, 스가 총리도 아베의 정책적인 지향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시대도 끊임없이 전략과 우경화의 이념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점을 한국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역사

108)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965년 기본 조약으로 한국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5억 불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식민지 시대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경제적인 협력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2) 한일갈등의 관리시스템 필요

한일 양국은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의 우파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결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징용공 문제에서는 한국이 65년 기본조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2(한국 정부, 한국 기업) + 2(일본정부, 일본기업) 이 재단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재단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이 일본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재단을 만드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일정책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는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것도 우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에 경사되는 것은 더욱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미일 동맹을 통한 신냉전논리로 미일이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는 우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런 면에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북한문제에 대해 방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동북아 정책의 협력자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선 한국에서 중국,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대중, 대일정책은 대북문제에 치우진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미중의 대립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는 전략적인 대화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도 안보 분야에서 정보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혁태. “역사와 안보는 분리 가능한가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창작과 비평』 제42권 1호, pp. 380~394, (창비, 2014).

권혁태. “특별기획: 일본 ‘우경화’의 재해석/ 교과서 문제를 통해 본 일본사회의 내면 읽기”, 『역사비평』, pp. 16~33, (역사비평사, 2001).

김수종. “일본의 보수 우익화를 경계하면서”, 『인물과 사상』, pp. 204~210, (인물과 사상사, 2002).

김영.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요시다 쇼인”,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pp. 144~147, (대한일어일문학회, 2018).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 사회』, 제99호, pp. 36~62, (비판사회학회, 2013).

김태기. “일본회의의 성장과 종교단체의 역할: 세이쵸노이에(生長の家)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4, pp. 263~311, (한일관계사학회, 2016).

남기정.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과 리더십,” 손열 편,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EAI, 2013).

문은석.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 –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50, pp. 85~10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박영준. “탈냉전기 일본의 대국(大國) 구상: 보통국가론과 평화국가론의 국가구상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23호, (현대일본학회, 2006).

_____. 2008. 『제3의 일본』, 한울아카데미, 제1부. (한울아카데미, 2008)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아베 내각의 대외전략 기조,” 박철희 편,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p. 21~27, (동아시아재단, 2014).

_____.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_____.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일본비평』10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석주희. “일본 우익에 대한 소고 – 아베내각과 일본회의”, 『내일을 여는 역사』, 76호, pp. 20~33,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9).
스가노 다모쓰.『일본 우익 설계자들』, p. 11, 20, pp. 109~171, (살림, 2017).
아우키 오사무.『일본회의의 정체』, p. 37, 229, pp. 47~48, 102~103, 217~218, (율리시즈, 2017).
야쿠시지 가쓰유키.「정치와 미디어가 한일관계에 준 영향」,『한일관계 50년의 성찰』, (오래, 2017).
이경주. “특별기획: 일본 ‘우경화’의 재해석/ 일본의 군사대국주의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 『역사비평』, pp. 34~54, (역사비평사, 2001).
이면우. “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 우경화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1호, pp. 103~144,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5).
이신철.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일역사논쟁 – 아베정권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pp. 222~25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이원덕. “세계화 시대의 일본 외교안보정책: 우경화 속의 보통국가화,”장달중,『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pp. 149 - 153,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_____.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과 보통국가화”,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 (일조각, 2005).
정애영. “일본 우익의 기원”, 『내일을 여는 역사』, 53, pp. 147~164, (재단법인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3).
정항석. “나르시즘적 일본 보수 우경화와 한일관계”, 『한국동북아논총』 76호, pp. 223~245, (한국동북아학회, 2015).
조경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국가주의·백래시의 연동: ‘새역모’와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pp. 98~119, (새얼문화재단, 2019).

조세영.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중일관계,”, 『성균차이나 포커스』. (성균중국연구소).
조양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국 및 대외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소, 2013).
_____. “한국의 시각에서 본 일본의 역사인식,” NEAR재단,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김영사, 2015).
_____. “아베(安倍) 담화 이후의 한일관계,” 『한일협력』, 가을호, (한일협력위원회, 2015).
_____. “일본의 외교정책”,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16).
_____.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63, (외교안보연구소, 2017).
진창수. “한일관계를 둘러싼 동향과 개선방향.” 『한일협력』 2014년 가을호 (2014).
_____.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해법”, 『세종정책 브리프』, No.2019-11 (2019).
_____. “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 『외교』, (2019).
_____. “아베와 한일관계 전망”, 『한일협력』, (2019).
_____. “韓日両国のナショナリズムとポピュリズムを警戒する”, 『學士會会報』 第939号 (2019).
카야마 히로토·탁지웅. “특집 일본 다시보기-일본 사회과 우경화 되고 있다”, 『기독교사상』, 46권 8호, pp. 82~95, (대한기독교서회, 2002).
키노시타 치가야·김상운. “아베 정권에서 일본은 우익화 했는가?: 정치의 수축과 일본 사회의 향배”,『실천문학』, pp. 34~48, (실천문학사, 2014).
타와라 요시후미. “[說木] 역사를 改作하는 우파세력의 최근동향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5권, pp. 142~16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하종문. “넷우익을 통해 본 일본 우경화의 정치 동학”, 『일본비평』, pp. 256~288,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1-18: 최근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에 대한 우리의 외교안보적 대응방향』, pp. 1~1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한상일. "시론 일본 우경화 바로알자", (조선일보, 1999).
_____. 2014.「일본의 우익사상과 아시아주의」,『일본비평』10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홍성후. "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pp. 45~64, (한국동북아학회, 2014).

〈국외문헌〉

教科書レポート編集委員会.『教科書レポート』, 52号, pp. 30~36,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2009).
_____.『教科書レポート』, 54号, pp. 13~14,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2011).
_____.『教科書レポート』56号, p. 31, (日本出版労働組合連合会, 2013.).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成澤宗男.「日本会議のルーツと国家神道―価値同一性強要の戦後的変容に見る神道勢力の陥穽」,『「開戦前夜」のファシズムに抗して』, pp. 78~80, (かもがわ出版, 2015).
中野晃一.『右傾化する日本政治』, (岩波書店, 2015).
中北浩爾.『自民党政治の変容』, 第4章, pp. 4~5, (NHK出版, 2014).
田久保忠衛.「日本会議」批判に大反論!」,『月刊Hanada』, (飛鳥新社, 2016).
東京新聞. 2014.7.30, pp. 26~27.
琉球新報. 2018.7.20.「育鵬社推進団体に公費 教育再生首長会議、事務委託 宮古・石垣市長も支出」.
阪田恭代.「朝鮮半島と日米同盟」猪口孝(監修),『日米安全保障同盟』, (原書房, 2013).
塩田潮.『安倍晋三の力量』, pp. 160~165, (平凡社, 2006).
しんぶん赤旗.「戦後70年」, 俵義文の発言, (日本共産党, 2015.1.17).

_____.「「改憲」意見書 33都府県議会で採択」, (日本共産党, 2016.2.7).
_____. (日本共産党, 2018.4.30).
神社新報. (神社新報社, 1977.1.17.)
安倍晋三・岡崎久彦.『この国を守る決意』, ch.4, (扶桑社, 2004)
安倍晋三.『美しい国へ』, ch.7, (文芸春秋, 2006).
産経新聞. 2016.9.22.「敗者の口から飛び出すリベラル衰退と陰謀論 都知事選が終わって…」.
朝日新聞. 2016.12.16.「日本会議をたどってII, 5教育基本法改正その先に憲法」.
山崎雅弘.『日本会議—戦前回帰への情念』, p. 20, (集英社新書, 2016).
渡辺昭夫.「吉田茂——状況思考の達人」, 渡辺昭夫編.『戦後日本の宰相たち』, (中央公論社, 1995).
渡辺治.「ネオ・ナショナリズム台頭の背景と役割」, 大内裕和編著,『愛国心と教育』, (日本図書センター, 2007).
上杉聡.『日本会議とは何か』, 第5章, p. 19, (合同出版, 2016).
五百旗頭真編.『戦後日本外交史 (第3版補訂版)』, p. 284, (東京: 有斐閣, 2014).
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編.『歴史教科書への疑問: 若手国会議員による歴史教科書問題の総括』, (1997).
週刊金曜日. 2014.8.22.「安倍政権を完全支配する「日本会議」の正体(根底から暴く!)」, 講談社.
_____. 2015.6.5.「正念場を迎えた「戦争賛美本」との闘い」, 講談社.
週刊新潮. 2008.1.31.「私たちはなぜ「国基研」を作ったか」.
俵義文. 1997. pp. 47~148.
_____. 2004.「教育基本法の「改正」を目論むひとびと」,『世界』, 4月号, (岩波書店, 2004).
_____.「安倍首相の "履歴" とタカ派人脈——『闘う政治家』がはらむ脆弱さ」,『前衛』, 813, pp. 130~133.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2007.1.).
_____.『〈つくる会〉の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 2008).
_____.『日本会議の全貌』, p. 21, (花伝社, 2016).

_____.「安倍政権を支える日本会議と「日本会議議連」」, 成澤宗男 編著,『日本会議と神社本庁』, p. 207, (金曜日, 2016).
_____.『日本会議の野望』, pp. 30~68, (花伝社, 2018).
寺田喜朗. 「日本会議と創価学会―安倍政権を支えるコミュニティ―」,『現代日本宗教 2017』, pp. 106~110, 112~115, (国際宗教研究所, 2017).
北岡伸一.『「普通の国」へ』,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0).
林博史, 渡辺美奈, 俵義文.『「村山・河野談話」見直しの錯誤―歴史認識と「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 pp. 58~60, (かもがわ出版, 2013).
堀幸雄.『戦後の右翼勢力(増補版)』, p. 224, (勁草書房, 1993).
藤原彰·森田俊男.『近現代史の眞實は何か』, pp. 19~20, (大月書店, 1996).
藤生明.「日本会議と葦津珍彦」,『現代宗教 2018』, pp. 92~108, (国際宗教研究所, 2018).
Michael Green, "Japan in Asia," David Shambaugh and Michael Yahuda,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8), pp. 178-180.
Tsutomu Kikuchi, "Collective Hedging: What Drives Regional Institution-building in the Asia-Pacific?." Evan Berman and M. Shamsul Haque (Ed), *Asian Leadership in Policy and Governance* (Emerald Group Publishing, 2015), ch. 3.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Yanghyeon Jo, "Japan's New Security Bills: Impacts on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NEA The Review of Northeast Asian Studies*, 7:3 (Winter 2015); 西原正 (監修). 朝雲新聞社出版業務部 (編集).『わかる平和安全法制』(朝雲新聞社, 2015).

〈국내 인터넷 자료〉

연합뉴스. 2018.6.13. “日방위상, 한·미훈련·주한미군,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 역할”.

연합뉴스. 2018.10.8. “아베,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할 생각 없는 것으로 안다’,”.

중앙일보, 2014.9.4. “아베 내각 접수한 극우 대본영 ‘일본회의’,”.

〈국외 인터넷 자료〉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s://jinf.jp/about/prospectus) (2018년 10월 28일 조사).

뉴스 포스트 세븐. 2016.5.16. 「출판정지 거부의 『일본회의의 연구』 이상한 페이스로 팔렸다」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60516_412135.html, 2018년 10월 29일 조사).

내각관방·내각부·외무성·방위성,「『평화안전법제』의 개요」, (内閣官房·内閣府·外務省·防衛省, 「『平和安全法制』の概要」.) http://www.cas.go.jp/jp/gaiyou/jimu/pdf/gaiyou-heiwaanzenhousei.pdf.

니시오 칸지가 월간지 『자유』 2월호에 쓴 글이 제개되어있는 홈페이지, (https://ssl.nishiokanji.jp/blog/?p=622) (2016년 10월 5일 조사).

리테라. 2016.6.20. 「『일본회의는 매우 “꺼림직한 것”을 안고 있다』 선구적 연구자 · 우에스기 사토시가 말하는 일본회의의 최대 문제는?」. (https://lite-ra.com/2016/06/post-2354_3.html) (2018년 10월 27일 조사).

메이지의 날 추진협의외 홈페이지, (http://meijinohi.com) (2018년 10월 24일 조사) 부부별성에 반대하는 가족의 연을 지키는 국민대회 안내가 나와있는 홈페이지, (https://blog.goo.ne.jp/nippon-mamoro/e/91f603a4e1f9c15d592285a40190dafa) (2018년 10월 22일 조사).

문예춘추의 웹진 http://gekkan.bunshun.jp/articles/-/530, (2018년 10월 22일 조사).

문예춘추. 2013.1.10. 「아베정권의 운명을 쥐고있는 『신 · 4인조』」. (http:/

/gekkan.bunshun.jp/articles/-/530, 2016년 11월 10일 조사).
사쿠라이의 개인 홈페이지, (https://yoshiko-sakurai.jp/2008/01/31/664) (2018년 10월 28일 조사).
생장의 집 홈페이지, (http://www.jp.seicho-no-ie.org/news/sni_news_20160609.html) (2018년 10월 29일 조사).
「생장의 집」 창시자·타니구치 마사하루 선생을 배우는 회의 홈페이지, (http://manabukai.org/report/category_02/category_02_2012.html) (2018년 10월 27일 조사).
요시이에 히로유키(義家弘介) 의원의 홈페이지, http://yoshiie-hiroyuki.com/i-info/inf/inf.cgi?cm=2&mode=detail&year=2011&no=904) (2018년 10월 24일 조사).
웹진 iRONNA.「일본회의 '음모론' 에 철저 반론! 아베정권을 좌우하는 컬트 비판의 거짓」(日本会議「陰謀論」に徹底反論!安倍政権を牛耳るカルト批判のウソ), (https://ironna.jp/article/4026) (2018년 10월 29일 조사).
일본청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eikyou.org/nihonkyogikai.html).
「위안부관계조사결과발표에 관한 고노내각관방장관 담화, 1993년 8월 4일」,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平成5年8月4日」.) (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kono.html).
일본회의 홈페이지의 관련 기사, (https://www.nipponkaigi.org/activity/archives/1023) (2018년 10월 28일 조사).
일본회의 홈페이지, (https://www.nipponkaigi.org/opinion/archives/8397, https://www.nipponkaigi.org/opinion/archives/8392) (2018년 10월 29일 조사).
전쟁을 만들지 않는 1000인 위원회 홈페이지의 기사, (http://www.anti-war.info/shomei/) (2018년 10월 28일 조사).
츠쿠루카이와 캉가에루카이에 관한 홈페이지, (http://chushingura.biz/p_nihonsi/episodo/epi_ndx_box/tukurukai02.htm) (2016년 10월 3일 조사).

츠크루카이의 소동의 의혹이 풀림: 보수파에 잘못 섞여들어 감「컬트 사고」가 적혀있는 홈페이지, (http://hiro-san.seesaa.net/article/250625953.html) (2018년 10월 26일 조사).

타와라 요시후미. 2006.3.14.「츠크루카이」의 내부항쟁의 역사와 현재의 내분이 적혀있는 홈페이지,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siryou20060314.htm) (2016년 10월 4일 조사).

후루야의 저서. 2018.『日本を蝕む「極論」の正体』, 新潮新書 을 요약한 칼럼 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18/01220600/?all=1) (2018년 10월 28일 조사).

별첨

■ 일본회의와 우경화 관련연표

■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대회 식순 및 결의문

1. 일본회의와 우경화 관련 연표

▸ 1966년
'생장의 집 학생회' 결성

▸ 1967년
7월: 나가사키대학 학생협의회 설립(의장 가바시마 유조), 전학련·전공투에 대항 조직으로 부상

▸ 1969년
5월: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 결성, 미시마 유키오가 고문

▸ 1970년
11월: 전국학생자치체연락협의회의 OB조직으로 일본청년협의회 설립
미시마 유키오 할복 자살

▸ 1974년
4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 설립, 생장의 집 총재 다니구치 마사하루(谷口雅春)도 참가, 생장의 집 출신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가 사무국 총괄

▸ 1975년
10월: '쇼와 50년을 축하하는 국민 집회(昭和50年を祝う国民の集い)' 개최(1만 명 집결)

▸ 1976년
1월: 미키(三木) 내각에게 정부 주최의 '천황폐하재위50년기념식전' 요망, 11월에 실현
9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 간사이(関西)대회' 개최(이후 매년 블록 별 대회 개최)

▸ 1977년
1월: 일본청년협의회(서기장 가바시마 유조)가 모임의 사무국으로 들어감
9월: 원호 법제화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결의 운동 개시

▸ 1978년
7월: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 발족(의장 石田和外 전 최고재판소 장관)
11월: '원호법제화실현총궐기국민대회' 개최(1만 명 집결)

▸ 1979년
1월: 원호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진정 활동 실시(~6월)
6월: 원호법 제정

▸ 1981년
3월: 원호법 성립을 잇는 '일본을 지키는 도도부현민회의(日本を守る都道府県民会議)' 각지에서 결성
10월: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를 모태로 개헌을 주창하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국민회의, 의장 加瀬俊一) 결성

▸ 1982년
8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발발
10월: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간담회' 개최, 교과서 자주 편찬이 제안됨
11월: 헌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책위원회' 발족

▸ 1983년
8월: 생장의 집이 우익 운동을 중지, 85년 6월 다니구치 사망, 이후 정치적으로는 생태주의 리버벌을 지향

▸ 1984년
3월: 새 역사교과서를 작성할 '역사교과서편찬위원회'(대표 村尾次郎) 발족
5월: 정책위원회가 '헌법 개정에 관한 중간보고' 발표

▸ 1985년
5월: '천황폐하재위60년봉축위원회' 결성
8월: 역사교과서편찬위원회, 고교 역사교과서『신편일본사』검정 신청
10월: 헌법 개정 운동 방침을 삭제한 자민당에게 복귀를 요구하는 요청서 제출

▸ 1986년
7월:『신편일본사』검정 합격, 34학교에서 채택

▸ 1987년
8월: 전후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서 '전몰자추도중앙국민집회' 개최

▸ 1991년
6월: 국민회의 2대 의장으로 마유즈미 도시로(黛敏郎) 취임
신헌법제정선언 채택, 신헌법 대강의 작성에 착수
12월: '대동아전쟁개전50년을 생각하는 국민 집회(大東亜戦争開戦50年を考える国民の集)' 개최

▸ 1992년
5월: 미야자와(宮沢) 내각에 천황의 중국 방문 중지를 요청하는 활동 전개, 8월 천황 방중

▸ 1993년
5월: 국민회의 결성 10주년 기념식에서 '신헌법의 대강' 발표
8월: 호소카와(細川) 수상에게 '침략'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청
자민당 내에 '역사·검토위원회' 설치

▸ 1994년
4월: '종전50주년국민위원회'(회장 加瀬俊一) 결성, 국회의 부전결의 반대 서명 개시
11월: 전몰자 추도 감사에 관한 지방의회 결의(24현)
12월: 자민당에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회장 奥野誠亮) 설립

▸ 1995년
3월: 부전결의의 반대 서명 506만 명을 모아 국회 청원, 긴급 집회 개최
6월: 사죄결의 중의원 가결, 참의원 부결(무라카미 마사쿠니 참의원 의원이 중심)
새 헌법을 연구하기 위해 '신헌법연구회'(小田村四郎 대표) 설립
12월: '부부별성에 반대하는 국민위원회' 설립

▸ 1996년
4월: 나가사키원폭자료관의 전시 시정 운동을 전개
9월: '자학적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시정하라는 전국 순회 캠페인

▸ 1997년
1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출범
2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결성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라는 국회 논의를 전개
3월: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국민회의의 연석 임원회의에서 통합을 결의

5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간담회, 회장 島村宜伸) 설립, 200명 가입
일본회의(회장 塚本幸一) 설립
10월: 도쿄도평화기념관 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서 추궁하여 건설 동결

▸ 1998년
4월: 도덕 교육 추진, 국기국가법제화를 목표로 국회 논의를 전개
5월: 간담회에 헌법, 외교, 교육의 세 프로젝트 설치
9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하는 국민집회 개최

▸ 1999년
8월: 국기국가법 제정

▸ 2000년
5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이나모토 고사쿠(稲葉興作) 2대 회장 취임
9월: '새 교육기본법을 요구하는 모임'(회장 西澤潤一) 결성

▸ 2001년
8월: 고이즈미 수상에게 8월 15일의 야스쿠니 참배를 요청, 13일에 참배

▸ 2002년
3월: 부부별성 반대 국회의원 서명 117명, 국민청원 서명자 170만 명
5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총회에서 국립추도시설 건설 반대를 결의
10월: 젠더프리 교육 문제를 제창
12월: 국립추도시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246명에 달함, 추도간담회가 국립추도시설의 건설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

▸ 2003년
1월: '일본의 교육개혁유식자간담회'(민간교육임조, 회장 西澤潤一) 설립
8월: 교육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운동

▸ 2004년
1월: 고이즈미 내각이 국립추도시설 건설 유보를 결정
2월: 일본회의와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의 합동 임원회의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운동의 개시를 결의

11월: 교육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이 350만 명을 돌파, 국회의원 찬동자 380명, 지방의회가 33도부현 236시정촌에 달함

▸ 2005년

7월: 종전 60주년에 즈음하여 야스쿠니 신사 20만 명 참배 운동 제창
8월: 야스쿠니 신사 20만5천 명이 참배
11월: 여성천황 도입에 관한 유식자회의의 최종 보고서

▸ 2006년

2월: 일본회의, 2006년도 임시 이사회에서 황실전범 문제와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운동 방침의 결의
황실전범의 졸속 개정 반대 긴급 집회, 국회의원 반대 서명이 173명
4월: 교육기본법 정부 개정안의 3곳(애국심 등) 수정 요청
9월: 히사히토(悠仁)친왕 탄생
12월: 교육기본법의 전면 개정, 일본회의의 요구는 해석에 포함됨

▸ 2007년

1월: 아베 수상, 이세 신궁에서 여성천황을 도입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을 백지 철회하겠다고 명언
3월: 2007년도 이사회에서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한 운동 방침 결정
5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가결

▸ 2008년

1월: 인권옹호법안 반대 운동
8월: 교과서 검정 제도 개정을 향한 국민운동

▸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탄생

▸ 2010년

1월: 영주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반대하는 국민 집회 개최
3월: 부부별성 반대 국민대회 개최, 서명자 252만 명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수상의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의 비판 성명 발표
9월: 센카쿠(尖閣)를 지키는 국민운동 개시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9월: 영토 영해를 지키는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서명자 224만 명

▸ 2012년

5월: '황실의 전통을 지키는 국민 모임'(회장 三好達) 설립, 전통에 기반한 황위 계승 제도와 '여성 궁가' 반대 주장

12월: 아베 정권 발족

아베 수상, 황위 계승의 남계 남자 한정과 여성 궁가의 철회 표명

▸ 2013년

11월: '헌법 개정 실현! 일본회의전국대표자회의' 개최, 본격적인 헌법 개정 운동의 개시

헤노코(辺野古) 이전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현민 서명 8만 명 지사에게 제출

12월: 나카이마(仲井眞) 오키나와 현지사, 정부의 헤노코 매립 신청 승인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 2014년

2월: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결의 운동 개시, 2015년 1월 10일까지 25부현 의회, 36시정촌 의회가 채택

3월: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 운동 개시, 중참 370명 서명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결정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10월: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 출범, 일반 시민 천만 명 찬동자 모집이 목표

11월: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에서 나카이마 지사의 지원 활동 실시

12월: 제3차 아베 내각 발족

▸ 2015년

4월: 제54회 상임이사회에서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가 4대 회장 취임

8월: 평화안전법제의 신속한 성립을 요구하는 유식자 500명의 찬동을 얻어 '평화안전법제의 조기성립을 요구하는 국민 포럼'을 설립

11월: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현민 모임' 47도도부현에 결성

▸ 2016년

2월: 햐쿠타 나오키(百田尚樹) 등이 만든 헌법 개정 DVD 완성, 전국 상영 운동 개시

5월: 개헌 찬성 1,000만 명 운동의 참가자 700만 명 돌파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자 2/3 확보

▸ 2017년

3월: 간담회가 총회에서 헌법 개정과 황실 제도에 관한 신년도 방침 결의

5월: 헌법기념일에 아베 수상이 자위대 조항을 첨가하는 개헌 방침과 2020년까지 신헌법 시행을 제언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자 2/3 확보

11월: 일본회의·간담회의 설립20주년기념대회 개최, 개헌 국민운동에 매진한다는 선언서 채택

2.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대회 식순 및 결의문

(1)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설립 5주년 대회

식순	담당자	직위
개회사	고보리 게이치로	일본회의 부회장, 도쿄대학 명예교수
주최자 인사	나카가와 쇼이치	간담회 회장 대행, 자민당 조직본부장
내빈 축사	히라누마 다케오	경제산업상
	고가 마코토	자민당 전 간사장, 일본유족회 회장
	오기 지카게	국토교통상
특별 인사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
	요코타 시게루·사키에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 연락회 대표
	나카야마 다로	중의원 헌법조사회 회장
	니시자와 준이치	이와테 대학 학장

* 직위는 일본회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대로 표기했다. 이하 마찬가지
* 위 표에는 없지만 대회결의를 다나카 야스히로(田中安比呂, 1940~) 일본회의 이사장이 낭독했다.

◈ **결의문** ◈

1. 우리는 국회가 신속히 헌법 개정의 발의를 단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기조로 하는 교육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소홀히 하는 국립추도시설 계획을 저지하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정착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재생을 지향하여 도덕심 함양의 국민운동에 노력한다.

(2)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설립 10주년 대회

식순	담당자	직위
주최자 인사	미요시 도루	일본회의 회장, 전 최고재판소 장관
	히라누마 다케오	간담회 회장, 전 경제산업상
내빈 축사	이부키 분메이	자민당 간사장
	마쓰바라 진	민주당 중의원의원
	야마타니 에리코	수상 보좌관
특별보고	아리무라 하루코	참의원의원
	에토 세이이치	참의원의원
각계 제언	시마무라 요시노부	황실의 전통을 지키는 국회의원모임 회장, 전 농림수산상
	요코타 시게루·사키에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 연락회 대표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 부장관
	긴비레이(金美齡)	전 타이완총통부 정책고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의원
	요시다 도시유키	일본회의지방의원연맹 부간사장, 오사카 부의회 의원
	오노다 마치에	일본여성모임 회장
국민운동의 전진을 위해	오하라 야스오	일본회의 정책위원회 대표, 고쿠가쿠인 대학 교수
개회사	고보리 게이이치로	일본회의 부회장, 도쿄대학 명예교수
내빈 축사	오노다 히로오	(재)오노다 자연숙(自然塾) 이사장
건배	야마모토 다쿠마	일본회의 부회장, 후지쓰주식회사 명예회장
특별 인사	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
선언문 발표	모모치 아키라	일본회의 상임이사, 니혼(日本)대학 교수

◈ **선언문** ◈

1. 우리는 '전통·문화의 존중'과 '애국심·도덕심의 함양'을 구가한 신 교육기본법을 토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의 육성을 지향한다.
1.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립국가로서 어울리는 신헌법의 제정에 노력한다.
1. 우리는 내년 천황폐하 즉위 20년의 경사스런 해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통합의 중심인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며 전국 곳곳에 성대한 봉축 행사를 실시한다.

(3)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설립 20주년 대회

식순	담당자	직위
개회사	다나카 쓰네키요	일본회의 부회장, 신사본청 총장
주최자 인사	다쿠보 다다에	일본회의 회장, 교린(杏林) 대학 명예교수
	히라누마 다케오	간담회 제3대 회장, 전 중의원의원
	후루야 게이지	간담회 회장, 중의원의원
특별 내빈축사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
각 당의 축사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고문, 중의원의원
	마쓰자와 시게후미	희망당 참의원의원단 대표, 참의원의원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간사장, 참의원의원
각계의 제언	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
	이즈카 시게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대표
	고모리 요시히사	레이타쿠(麗澤) 대학 특별교수
	다케다 쓰네야스	작가
헌법개정 운동의 전진을 지향하며	가토 모리유키	일본회의 에히메(愛媛) 현본부 상담역, 전 에히메 현지사
	마쓰다 요시아키	일본회의지방의원연맹 회장, 가나가와 현의회 의원
	벳부 마사토시	NIPPON헌법 PROJECT 운영위원
선언문	아미타니 미치히로	일본회의 이사장, 메이지신궁 숭경회 이사장

* 20주년 대회에서는 항목으로 명기된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용에서는 개헌이 강조되고 있다.

* 20주년 대회에서는 참가자의 정부 내 직위가 명기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